

윤진표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버마와 한국의 군부정권 비교

-네윈정권과 박정희정권의 경제성과를 중심으로-

200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김현정

# 버마와 한국의 군부정권 비교

- 네윈정권과 박정희정권의 경제성과를 중심으로 -

윤진표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김현정

# 인 준 서

김현정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 개요

본 논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버마와 한국에서 1960년대 제3세계에 일상적 현상이었던 쿠데타를 통해 등장한 군부정권의 특징과 그들이 추진했던 경제정책과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논문은 버마와 한국에서 군부정권이 등장하게 된 원인과 쿠데타 과정을 분석하고, 군부정권이 선택했던 경제체제와 국가 성격을 바탕으로 어떠한 경제성과를 이루었는지 살펴봄으로써 양대 사례분석을 이용한 비교정치연구를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연구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1960년대 군사쿠데타로 등장한 버마와 한국의 네윈정권과 박정희정권이 집권했던 시기를 기간으로 삼고, 군부에 관한 기존연구들을 검토하여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두 가지 경제체제와 약탈국가와 발전국가로 구분되는 국가성격을 독립변인으로 보는 분석틀을 설정하고 군부정권의 경제정책과 결과를 기간별로 분석하고 비교함으로써 버마와 한국의 군부정권의 경제성과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버마와 한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가능성이 큰 사례들이다. 두 나라는 식민 지배를 경험하고 1940년대 독립을 얻었으며, 1950년대 의회민주주의 시기를 거쳐 1960년대 초반 네윈과 박정희의 쿠데타에 의해 군부 권위주의 시대로 들어섰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민주주의를 향한 저항운동이 발생하는 등 버마와 한국은 유사했지만 그러나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경제성장 경로를 밟게 되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1940년대 버마와 한국이 식민지배에서 독립할 당시 버마는 한국에 비해 여러 모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버마는 당시 동남아시아 제1위의 쌀 수출국이었으며 경제적 자원도 풍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48년에 독립한 버마는 우누정권 하의 과도기를 거친 후 1962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네윈에 의해 경제개발이 추진되었다. 네윈이 내세운 소위 ‘버마식사회주의’ 경제개발은 사회주의 방식으로 자력갱생의 원칙에 입각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개발 방식은 그 후 30년에 가까운 실험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침체만을 유발했을 뿐 상당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그 형태가 변화되었고 결국 1988년 민중봉기에 의해 실패한 실험으로 판명되었다.

이와는 상대적으로 한국은 경제적 자원과 자본의 부재는 물론 지리적 위치 때문에 독립 이후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야 했다. 그러나 1961년 박정희의 군사쿠데타 이후 한국은 군부정권에 의한 수출지향형 경제개발계획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었고, 산업화와 사회적 근대화가 추진되면서 선진국 경제와의 협력 체제를 더욱 강화시켜 나갔다. 이와 같은 전략은 연 9%라는 높은 경제성장률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이러한 버마와 한국의 상이한 경제성과에 주목하여 군부정권이 선택했던 각 국가의 경제체제와 국가성격,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성과의 결과를 관련지어 비교분석하였다. 근대화를 추진하려던 버마와 한국의 군부정권은 각각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를 선택하였다. 지리적 이점이 뛰어나고 경제적 자원이 풍족하며 경제상황이 훨씬 좋았던 버마는 자립경제 원칙인 버마식 사회주의를 내세워 폐쇄적인 경제개발정책을 내세웠고, 한국은 부족한 자원과 극빈한 경제상황으로 외자 유치를 통한 대외개방적인 자본주의적 경제개발정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 각각의 경제체제들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경제정책들을 통해 실행되었지만, 그로 인한 경제성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또한 경제성과는 경제체제의 선택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성격의 차이에서도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의 성격은 크게 발전국가

와 약탈국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그 평가는 국가의 자율성과 국가능력, 그리고 발전지향적인 리더십의 존재라는 기준을 가지고 설명하였다.

네윈정권은 모든 산업의 국유화정책이나 공출제도를 통한 농업이익의 확보 등으로 국가가 막대한 잉여가치를 획득할 수 있었지만 군부에 의한 중앙권력의 독점과 군부정권 내부의 무능과 비효율로 인해 버마의 경제는 악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더욱이 네윈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저력을 보이지 못했으며 오히려 미신에 의존하고 경제과탄의 책임도 회피하는 등 방관적 리더십을 벗어나지 못했다. 네윈정권 하의 버마는 국가자율성은 갖고 있었으면서도 국가능력의 부재와 무능한 리더십으로 인한 약탈국가적 성격으로 인해 경제적 낙후를 면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였다.

박정희정권은 역사적으로 국가자율성을 갖는 체제였고 경제개발계획의 추진과 경제기획처 등 전문적인 경제관리기구를 구성하여 국가능력을 높였다. 여기에 외자도입에 의한 자본의 확충과 중화학공업화 추진이라는 박정희의 확고한 경제발전 의지가 담긴 전략적 리더십도 함께 작용하였다. 한국은 발전국가의 조건인 국가자율성과 국가능력, 발전지향적 리더십을 갖고 있었다.

요약하면 군부정권하의 버마의 사회주의경제체제와 약탈국가성격, 한국의 자본주의경제체제와 발전국가성격이 극명한 차이의 경제성과를 만들었다. 경제성과의 차이로 인해 버마는 1987년 유엔으로부터 세계최빈국에 지정되었고, 한국은 세계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정치적으로 버마는 아직도 군부정권아래 놓여있지만 한국은 1988년 이래 자유선거에 의한 문민정권체제가 정착되었다. 군부정권 하의 두 나라의 경제체제의 선택과 국가 성격의 차이에 따른 상이한 경제성과는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 목 차

## 논문 개요

### I. 연구목적과 방법

-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 1
- 2. 기존연구의 검토 ..... 4
- 3. 논문의 분석틀과 개념 ..... 9

### II. 군부정권의 등장 ..... 18

- 1. 버마의 시대 상황과 네윈정권의 등장 ..... 18
  - 1) 버마의 시대적 상황 ..... 18
  - 2) 네윈의 쿠데타정권 등장 ..... 21
  - 3) 군부의 정치개입 동기 ..... 23
- 2. 한국의 시대 상황과 박정희정권의 등장 ..... 25
  - 1) 한국의 시대적 상황 ..... 25
  - 2) 박정희의 쿠데타정권 등장 ..... 26
  - 3) 군부의 정치개입 동기 ..... 28

### III. 네윈정권의 경제체제와 국가성격 ..... 31

- 1. 경제체제와 경제정책 ..... 31
  - 1) 1기(1962~1974년) : 버마식사회주의 ..... 31

① 농업화 .....	35
② 국영화 .....	42
③ 대외무역정책 .....	45
2) 2기(1974~1988년) : 버마식사회주의의 수정 .....	47
① 경제개발계획추진 .....	48
② 수정경제정책 .....	50
2. 국가성격 : 국가자율성, 국가능력, 리더십 .....	56
3. 네원정권의 경제체제와 국가성격의 평가 .....	58
<b>IV. 박정희정권의 경제체제와 국가성격 .....</b>	<b>62</b>
1. 경제체제와 경제정책 .....	64
1) 1기(1961~1971년) :수출주도형 산업화 .....	64
①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1962~1966년) .....	64
②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1967~1971년) .....	66
2) 2기(1972~1979년) : 중화학공업화 .....	69
①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1972~1976년) .....	69
②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1977~1981년) .....	71
2. 국가성격 : 국가자율성, 국가능력, 리더십 .....	72
3. 박정희정권의 경제체제와 국가성격의 평가 .....	77
<b>V. 네원정권과 박정희 정권의 경제성과 비교 .....</b>	<b>81</b>
<b>VI. 결론 .....</b>	<b>96</b>

참고문헌

ABSTRACT

## 표 목 차

<표-1> 경제체제와 국가성격으로 본 국가유형 .....	9
<표-2> 버마의 공출가격과 수출, 암시장가격의 비교 .....	39
<표-3> 버마의 쌀수출 .....	40
<표-4> 버마의 벼생산과 쌀수출 .....	41
<표-5> 군부집권 이전과 이후의 국유화 비중비교 .....	42
<표-6> 버마의 경제계획 .....	49
<표-7> HYV의 수확량과 화학비료투입량 .....	51
<표-8> 버마의 1962/63~1986/87년 동안의 공공투자율 .....	53
<표-9> 버마의 수출구조 .....	54
<표-10> 대외무역의 평가 .....	55
<표-11> 한국의 1960~70년대 외자도입 .....	67
<표-12> 경제개발계획의 목표와 실적 비교 .....	68
<표-13> 산업구조의 변화 .....	69
<표-14> 경제기획원의 행정고시 출신 관료의 학력과 경력 .....	76
<표-15> 우리나라 경제개발계획 및 실적 추이 .....	78
<표-16> 산업구조의 변화(1962~1987) .....	78
<표-17> 수출확대와 구조변화 .....	79
<표-18> 버마와 한국의 GDP비교 .....	85
<표-19> GDP성장률(%) .....	86
<표-20> GDP별 생산구조(%) .....	86
<표-21> 버마와 한국의 도시화 .....	87
<표-22> 버마와 한국의 무역증가율 .....	88

<표-23> 상품무역증가액 .....	88
<표-24> 세계무역 .....	89

## 그 립 목 차

<그림-1> 버마의 쌀수출가격과 매상가격(1948-86) .....	38
<그림-2> 버마의 쌀생산량, 정부매상량, 국내소비량, 수출량(1948-87) .....	46

# I. 연구목적과 방법

##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독립한 신생독립국들 중 대부분의 국가들은 민주자치정부를 수립하는 대신 군사쿠데타에 의한 군부정권을 경험해야 했다.<sup>1)</sup> 독립 당시 신생독립국들은 식민지 본국에 의해서 이루어진 장기간의 경제적 착취와 정치적 종속을 대체할 만한 능력이 부족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경제적 낙후와 정치적 불안정성을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없었으며, 이 때 등장한 것이 군부였다. 군부는 식민지 기간 동안 식민지 본국의 편익에 따라 각국의 치안과 국방의 의무를 담당함으로써 다른 정치세력들보다 조직화되고 현대화되었으며 가장 견고하고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군부의 무력은 강력한 정치수단이 될 수 있었다.

버마와 한국도 1960년대 군사쿠데타에 의해 군부정권을 경험한 국가들 중의 하나이다.<sup>2)</sup>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 버마와 한국은 각각 여러 면에서 상당히 다른 길을 걷고 있다.

---

1) 프레드 R 폰테어 메텐, 이춘근·남궁근 역, 『개발도상국 정치론』(서울: 평민사, 1981), pp. 160~161. 제3세계 국가들이 제국주의국가로부터 독립을 획득한 이후 도입한 의회민주주의가 얼마 가지 않아서 실패한 이유로서 Rupert Emerson은 민족국가적 통일성의 부재, 민주주의의 선행조건의 부재, 극소수의 엘리트만이 이해하는 민주제도, 다수 국민의 폭발적인 참여요구와 그 부작용을 들고 있다. Rupert Emerson, *From Empire to Nation*, (Boston: Beacon Press, 1960), pp. 277~278. 한배호, 『한국정치변동론』(서울: 법문사, 1994), p. 14. 재인용.

2) 버마(Burma)는 1989년 6월 18일부로 미얀마(Union of Myanmar)로 국호가 개칭되었다. 그러나 본 논문은 버마라는 국명이 1989년까지 전 세계에 영어로 통용되었고, 논문의 연구시기가 1988년까지로 한정된 이상 두 가지의 국명으로 인해 생기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국가명을 버마로 한다.

버마는 1987년에 유엔으로부터 세계최빈국(Least Less Developed Country: LLDC)으로 공식지정을 받았으며, 현재 1인당 GDP가 약 300달러이고, 국가평화발전위원회(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SPDC)라는 또 다른 군부정권체제를 유지하고 있다<sup>3)</sup>. 그에 비해 한국은 1980년에 신흥공업경제군(Newly Industrializing Economies: NIES)으로 지정되어, 현재 1인당 GDP가 약 15,000달러이며<sup>4)</sup>, 1987년 이래 자유선거에 의해 선출된 문민정부가 민주정권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1960년대 초 버마와 한국에 쿠데타가 발생하여 군부정권에 따른 각각의 경제발전을 계획했을 때에는 누구도 이러한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1940년대 버마와 한국이 식민지로부터 독립할 당시 버마는 한국에 비해 여러 모로 유리한 조건이었다. 버마는 한때 동남아시아 제1위의 쌀 수출국이었으며, 경제적 자원도 풍부했다.<sup>5)</sup> 이 때문에 버마는 독립 직후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할 국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48년에 독립한 버마는 우누정권 하의 과도기를 거친 후 1962년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네윈에 의해 경제개발이 추진되었다.<sup>6)</sup> 네윈이 내세운 소위 ‘버마식 사회주의’ 경제개발은 사회주의적 방식으로 자력갱생의 원칙에 입각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개발 방식은 30년에 가까운 실험을 통해서 지속적인 경제침체만을 유발했을 뿐이었고 몇 차례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그 형태

3) 외교통상부, 「미얀마개황」, 2003.2. p. 15.

4) 한국은행, 「2004년 한국 GDP지표」. www.bok.or.kr(2005.8.25)

5) 버마는 동경 92도-102도, 북위 10도-28도에 위치해 고온다습한 열대 몬순기후이며, 국토총면적은 약 67만 8천평방 킬로미터로 한반도의 약 3배이다. 일반적인 북고남저 지세로 남부는 세계적인 미곡산지로 알려진 델타지대가 발달하였으며, 또한 국토의 50%가 산림지대로서 티크, 깽목 등 풍부한 임산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앞의 책, p. 81.

6) 네윈은 본명이 슈마웅이었으나 독립투쟁 시 독립군 참모장인 그에게 아웅산 장군이 네윈(태양처럼 빛난다는 뜻)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강성재, 『쿠데타 권력의 생리』 (서울: 동아일보사, 1987), p. 49.

가 변화되었고 결국 1988년 민중봉기에 의해서 실패한 실험으로 판명됐다.

거듭된 경제정책의 실패와 경직된 군사정치로 인해 누적된 버마민중의 불만은 1988년 초부터 폭발하기 시작, 유례없는 대규모 민주항쟁으로 증폭되었지만, 정치적 대체세력을 마련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결국은 또 다른 군사쿠데타라는 비극적 사태로 귀결되고 말았다.

이와는 상대적으로 한국은 경제적 자원의 부재와 지리적 위치 때문에 독립 이후 강대국 사이에서 많은 곤혹을 치러야 했다. 그러나 1961년 박정희의 군사쿠데타 이후 한국은 자본주의를 경제체제의 기본으로 하여, 경제개발5개년계획 등 지속적인 개발경제정책을 시행한 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신흥도상국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왜 이러한 상이한 결과가 발생하였는가에 질문을 던지고, 이를 버마와 한국의 군부가 근대화를 추진하는 과정 중에 나타난 국가별 경제체제의 선택과 국가의 성격 차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sup>7)</sup> 따라서 본 논문은 1962~1988년의 네윈시기를 바탕으로, 특히 경제체제와 국가성격을 중심으로 ‘버마식 사회주의’ 경제개발의 과정과 실패를 알아보고, 이를 1963~1979년의 박정희 시기의 경제체제와 국가성격을 비교함으로써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두 나라의 쿠데타가 전혀 상반된 경제적·정치적 결과를 가져오게 된 원인과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

7) 본 논문에서 근대화(modernization)란 경제발전, 산업화, 사회적 동원화, 도시화 등을 의미한다. 일부 사회과학자들은 근대화와 정치발전 혹은 서구화를 동일시하는데 엄연히 근대화와 정치발전은 그 의미가 다르다. 이와 같은 입장의 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Samuel P. Huntington은 *“Political Development and Political Decay”* (1965)에서 근대화과정이 정치발전과 상당 부분 연관되어 할지라도, 근대화과정은 하나의 독립된 과정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yron Weiner는 *“Some Hypotheses on the Politics of Modernization in India”* (1959)에서 근대화란 산업화와 이를 수반하는 행태 및 가치의 유형과 동의어이고, 서구화는 제도와 가치, 이를테면 민주적 자치와 부녀자의 옷 등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근대화개념에 대한 설명은 신명순, 『제3세계정치론』 (서울 : 법문사, 1987), pp. 29~60.

## 2. 기존연구의 검토

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독립국들에게 나타난 군사쿠데타와 군부정권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사뮤엘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은 군부의 정치개입은 군 내부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사회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근대화 과정에 수반하는 급격한 사회동원과 사회세력의 정치참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기존의 정치체제가 이를 수용하지 못하게 되면 군부의 정치개입을 유발한다는 것이다.<sup>8)</sup>

아담 쉐보르스키(Adam Przeworski)는 군부에 의한 정치개입이 왜 스스로 붕괴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다. 민주주의에서는 갈등하는 조직들의 선호와 규칙으로부터 불확실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즉 불확실성이 제도화된 정치체제이지만, 군부지배는 어떤 특정한 결과가 발생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효과적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점적인 권력배분에 의한 자의적인 정치체제이다. 군부지배 하에서는 정치세력들의 자율적인 조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군부지배에 대한 위협은 정통성의 결여가 아니라 대항해계모니 조직의 등장과 확산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sup>9)</sup>

배링턴 무어(Barrington Moore)는 근대화의 성공에 필수적인 것을 유능한 지도력으로 꼽으며, 특히 사회내의 민중이나 급진적인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충분히 강력한 관료기구인 군과 경찰을 가까이에 거느리거나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강력한 관료기구를 기반을 둔 보수 정부는 단기적으로 뚜렷한 이점을 가지며,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도,

8) 사뮤엘 헌팅턴, 민준기 역, 『정치발전론』 (서울: 을유문화사, 1971), p. 325.

9) 아담 쉐보르스키, 임혁백·윤성학 역, 『민주주의와 시장』 (서울: 한울, 1997), pp. 28~138.

통제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sup>10)</sup>

프레드 R 폰 데어 메덴(Fred R. von der Mehden)은 2차대전 이후 개발도상국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진행된 군부의 정치개입은 주로 독립 직후 민간인 정부의 무능으로 사회, 경제, 정치적 진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군부지도자는 거의 전 생애를 군복무에 바친, 즉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 바로 군에서 그들의 경력을 쌓았던 사람들로 훈련뿐만 아니라 선진국 군대집단과의 교류를 통하여 민족주의(nationalism)와 단결(unity)을 극단적으로 의식하는 가치관을 가지게 된다. 자신들의 국가와 선진국간에는 지위와 격차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 결과 ‘근대화’, ‘서구화’ 또는 ‘발전’을 주장한다. 따라서 군부지도자는 바람직한 경제사회적 진보는 군부가 지원할 수 있는 안정된 정부 하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군부지배를 정당하다고 보았다.<sup>11)</sup>

프랭크 윌슨(Franke Wilson)은 군부지배란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 개입으로 군부가 실제로 지배한다는 것으로, 모든 권력은 군부가 장악하며, 군부가 혁명세력이 되면서 국가가 ‘병영국가(nation in arms)가 된다고 보았다. 또한 군부의 정치개입에 대한 동기를 설명하고 있다. 군부 개입의 동기는 여러 가지이지만,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군부자체의 이익옹호, ‘국가이익’의 보호, 특정한 계급·지역·인종의 이익보호, 정치개혁을 촉진 혹은 중단하려는 욕구가 그것이다. 그리고 윌슨은 군부에 의한 경제적 근대화와 산업화의 성공이 비록 있었지만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sup>12)</sup>

새뮤얼 E. 화이너(S.E. Finer)는 현대 정치에서의 군부에 대한 매우 포괄적이며 깊이 있는 사례분석연구를 통해 군부의 특성과 정치개입의 성향, 정

---

10) 베링턴 무어, 진덕규 역, 『독재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원』 (서울: 까치, 1999), pp. 442~443.

11) 프레드 R 폰 데어 메덴, 이춘근·남궁근 역, 앞의 책, pp. 162~188.

12) 프랭크 윌슨, 이명남·김왕식 역, 『비교정치학』 (서울: 동명사, 1999), pp. 197~214.

도, 결과 등을 집중적으로 기술하였다. 그는 군부가 민간조직에 비해서 정치적으로 월등히 유리한 이점이 있는데 그것을 조직의 우월성, 고도로 내면화된 상징적 지위, 무기의 독점으로 들고 있다. 군부는 사용할 수 있는 무력이 있다는 점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누리는 조직 혹은 명령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 점에서는 화이너는 군부가 민간인 지도자에 대하여 왜 반란을 일으키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왜 지금까지 복종하고 있었는가에 의문을 가지며, 다음과 같은 군부의 약점을 들어 완전한 군부지배의 영원한 지속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먼저, 군은 기술적인 능력이 부족하여 아주 원시적인 사회밖에 통치할 능력 밖에 안 된다는 점이다. 근대화로 인해 경제가 발전하고, 분업이 확대되며 제2차, 제3차 산업이 증대되고, 사회가 기술 및 노동조직의 전문 관료들 필요로 함에 따라 군은 결국엔 민간인을 구슬리거나, 민간인들과의 협력에 노력해야 한다. 이런 상태가 점점 늘어나는 정도만큼 군부지배는 약해진다. 또 한 가지는 군의 정당성 부족이다. 정당성 없이 무력이나 무력을 이용한 위협만으로 통치하기란 불가능하며 늘 끊임없는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보통 군은 정당성의 확보를 위해 쿠데타 직후에 선거란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선거가 군부지배의 영원한 지속을 유지시키긴 어렵다고 보았다.<sup>13)</sup>

알프레드 스테판(Alfred Stepan)은 일단 군부역할의 확대가 일어나면 그것은 다수의 공공정책 분야가 선출된 민간인에서 무책임한 군부통제로 넘어가는 것처럼, 민주주의의 안정성 뿐만 아니라 정당성을 감소시키며 지속되어 진전해간다고 지적하였다. 때문에 새롭게 전개되는 민주주의 국가들은 군부의 역할을 외부방어로 재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학자들과 정책 전문가들이 군사와 정보관련 분야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전문성을 획득하고

---

13) 새뮤얼 E. 화이너, 김영수 역, 『현대정치와 군부 : 군부 정치의 비교정치학적 분석』 (서울 : 현암, 1989). pp. 5~145.

입법부는 군사 및 정보체계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전문성을 갖추고, 이들에 대한 효과적이고 일상적인 감시능력을 발전시켜야 하며, 민주적 국가지도자들은 갈등조정에 군부의 개입을 제한하고, 군부 본래의 전문적 능력을 고양시켜야 한다고 보았다.<sup>14)</sup>

국내학자인 양길현은 한국과 니카라과, 미얀마의 경험을 중심으로 제3세계 민주화의 정치적 동학을 비교 연구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1980년대 제3세계 민주화의 물결을 조명한 것으로 군부의 역할이나 특징에 대한 설명보다는 민주주의와 민주적 동학에 대한 설명이 주요 내용이다.<sup>15)</sup>

이대규는 폴란드, 태국, 한국을 중심으로 군부정치개입원인에 대한 비교 연구에서 군부정치개입의 원인에 대한 과학적 · 체계적 · 종합적인 사례연구의 부족을 인식하고, 군부정치개입원인에 대한 비교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가 제시한 군부정치개입의 원인으로는 정부의 통치능력부족의 인식과 국민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분, 그리고 군부의 조합적 이익추구를 들고 있다.<sup>16)</sup>

조흥국은 동남아 국가들의 군부역할에 대한 이해와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특히 버마 군부에 대한 역사적, 사회문화적 고찰을 통해 버마군부의 형성배경과 특성을 논의하였는데,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정치경제적 의미가 아니라 문화인류학이나 역사학적인 측면이 강한 논문이었다.<sup>17)</sup>

---

14) Stepan. Alfred, *Rethinking Military Polit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8). p. 137. 김웅진 외, 『비교정치론 강의 2』 (서울: 한울, 1998), p. 152.

15) 양길현, “제3세계 민주화의 정치적 동학 비교연구: 한국, 니카라과, 미얀마의 경험을 중심으로,” 정치학박사논문, 서울대대학원, 1996.

16) 이대규, “군부정치개입원인의 비교연구: 폴란드·태국·한국,” 「21세기정치학회보」 제13집 1호 (2003).

17) 조흥국, “탈식민지시대의 버마 군부에 대한 역사, 사회문화적 고찰,” 「민족과 문화」 제2집 (1994).

위의 저서들과 논문들은 1960년대의 한 주류처럼, 2차대전 이후 갑작스럽게 독립을 맞은 제3세계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난 군사쿠데타와 그에 따른 군부의 정치·경제개입과 결과들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나타난 결과나 현상에 대한 서술적 나열의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너무나 많은 나라들을 각 사례로 나열해, 각각의 국가들에 대한 군부의 특성이라든지, 쿠데타의 발생원인, 군부에 의한 정치개입과 근대화의 과정, 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특히 개별국가에 대한 군부지배의 사례분석은 매우 미비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비교사례분석에 입각해 버마와 한국의 군부정권의 등장배경과 함께 각 군부의 근대화 과정 전반에 기본이 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서로 다른 경제체제의 선택과 약탈국가와 발전국가로 특징되는 국가 성격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상이한 경제성과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 3. 논문의 분석틀과 개념

본 논문은 1960년대 군사쿠데타로 등장한 버마의 네윈정권과 한국의 박정희정권의 경제체제의 선택과 국가성격이 상이한 경제성장으로 귀결되었다는 것을 기본 명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은 경제체제의 선택으로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대비시키며, 국가성격으로는 약탈국가와 발전국가의 유형으로 대비시키고자 한다.

<표-1> 경제체제와 국가성격으로 본 국가유형

		경제체제	
		사회주의	자본주의
국가성격	약탈국가	네윈정권의 버마	
	발전국가		박정희정권의 한국

근대화과정에서 자생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국내적인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후진국이 세계경제체제 하에서 후발산업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적 동원과 결집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 때 민족주의적 근대화의 주도자는 외자를 비롯한 자원동원능력과 재조정능력을 갖춘 유일한 존재인 국가일 수밖에 없었다.<sup>18)</sup> 따라서 본 논문은 국가에 중점을 두고,

18) 김선명, “한국 발전국가지기(1960-1979) 산업화의 정치경제: 국가·자본·노동관계를 중심으로,” 「연세사회과학연구」 제6집 (2000), p. 67.

논문의 분석시기상 국가는 곧 군부정권을 의미한다.

19세기 이래 후발근대화의 국가발전 동원체제로는 대조적인 두 개의 경제체제를 들 수 있다. 사회주의모델과 자본주의모델이다. 자본주의는 18세기 영국에서 처음으로 기본적인 형태를 갖추고 발전을 시작한 체제이다. 그 이론적 기초를 마련한 사람이 아담 스미스(A. Smith)였다.<sup>19)</sup> 19세기 이후,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특징을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상품생산이 이루어진다는 점과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는 점 등으로 보았다. 베버는 근대자본주의는 ‘직업으로서 합법적 이윤은 조직적·합리적으로 추구하는 정신적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요약하면 자본주의란 상품생산에 의해서 이윤을 획득하려고 하는 정신적 태도를 말하며,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특징은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상품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것,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본래 자본주의는 개인주의를 기본이념으로 출발한 체제로 ‘자유방임의 자본주의’로서 각 경제단위의 활동에 정부의 관여가 없거나 거의 무시될 정도인 경제체제를 의미한다.<sup>20)</sup> 그러나 이와 같은 경제체제는 과거에도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늘날에도 찾아보기 힘들다. 현대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예외없이 ‘혼합경제’(mixed economy)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상당한 정도로 정부가 개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된 자본주의’(regulated capitalism), ‘수정자본주의’(modified capitalism)라고 할 수 있다. 박정희가 선택한 경제체제인 자본주의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사회주의는 논리적으로 개인주의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자본주의체제의

---

19) 그러나 아담 스미스는 그 자신이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은 없으며, 다만 마르크스(K. Mark)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내적 모순을 파헤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자본주의자’ 또는 ‘자본주의적’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박명광,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경험과 미래』 (서울: 다나, 1990), p. 95.

20) 김영봉 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서울: 서경사, 1989), p. 37.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다. 처음에 사회주의라는 말은 런던에서 발간된 ‘협동지(Cooperative Magazine)’이라는 잡지에서 1827년에 처음으로 사용한 것을 효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사상은 이미 기원전 400년경에 이상국가론을 묘사했던 플라톤의 사상에서 발견할 수 있고, 근세 초에 와서는 영국의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사상’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이 생각한 사회주의의 본의는 공동체의 이상과 인간이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완전한 잠재성을 실현하고 인간적 해방을 성취할 수 있다는데 의견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주의개념은 반자본주의 논리로 사적 소유와 시장경제를 국가 소유와 계획경제로 대체한다는 의미로 마르크스와 레닌, 스탈린을 거치면서 다양하게 분화되어 공상적 사회주의, 마르크스 사회주의, 리카도의 사회주의, 독일의 민주사회주의, 영국의 민주사회주의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하였다.<sup>21)</sup>

네윈이 버마식 사회주의에 적용한 사회주의는 또 다른 형태의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스탈린식 사회주의’에 자립경제체제를 적용시킨 것이다. 스탈린식 사회주의는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 착취와 탄압에 대항하는 노동자 계급이 폭력적 혁명을 일으켜 사회주의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한 마르크스 이론과는 달리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인식한 후진국가들이 당연히 사회주의 국가 대열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주장으로, 무산계급에 의해 폭력혁명이 필요없이 자본주의 체제질서가 붕괴되어 사회주의로 이행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선 소련의 경제발전과 국력증강이 필요하다고 보고, 산업화를 목표로 민족주의와 강한 국가를 강조하였다.<sup>22)</sup> 네윈은 민족주의와 강한 국가를 토대로 경제발전을 추진하고자 했으며, 특히, 풍부한 자원과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농민수탈형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자립경제체제를 적용시켰다.

---

21) 박명광, 앞의 책, p. 33.

22) 박명광, 앞의 책, p. 57.

국가성격인 발전국가와 약탈국가의 개념은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의 원인을 국가중심적 접근법에 기초해 설명한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 패러다임에서 등장한다. 발전국가론은 몰역사적이고 도그마적인 해석에 머물러 있던 근대화이론, 신고전주의 발전론, 종속이론의 한계를 뛰어넘어 동아시아 성장에 관한 한 가장 유력한 설명을 제시하였고 후발산업화과정에서 국가의 전략적 시장개입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패러다임이다.<sup>23)</sup>

발전국가론(Developmental State Theory)은 후발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한 프리드리히 리스트(*Friedrich List*)와 알렉산더 거셴크론(*Alexander Gerschenkron*)의 계보를 잇는 존슨, 에반스 등에 의해 체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24)</sup>

찰머스 존슨(*Charmes Johnson*)은 발전국가 개념을 일본 경제의 성공을 설명하기 위해 개발했으나, 다른 동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의 경제발전을 설명하는 데에도 적용하였다. 그에 의하면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의 경우 국가는 민간부문에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의 설명과는 달리 그러

23) 1960년대 이후 동아시아의 발전현상을 이끌어온 발전국가론은 1997년에 발생한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에서 중요한 전환을 맞이한다. 동아시아의 IMF경제위기는 국가 주도 발전모델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전국가론은 비판을 받게 되면서, 경제패러다임은 다시 신자유주의로 복귀하는 현상을 가져왔다. 발전국가론은 자발적 행위자로서의 국가에 대한 인식의 지나친 편향성을 갖고 있어서 사회나 세계구조 및 제도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발전국가론에 대한 비판은 다음을 참고 한다. 박은홍, “발전국가론 재검토: 이론의 기원, 구조, 그리고 한계,” 「국제정치논총」 제39집 3호 (1999); 윤상우, “동아시아 발전국가론의 비판적 검토,” 「경제와 사회」 제1집 1호 (2001,여름); 양재진, “발전이후 발전주의론: 한국 발전국가의 성장, 위기, 그리고 미래,” 「한국행정학보」 제39권 1호 (2005); 조희연, “동아시아 성장론의 검토: 발전국가론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제36권 (1997.12); 백영철 외, 『한국정치경제의 위기와 대응』 (서울: 오름, 2001); 이병천, 『발전국가 자본주의와 발전 딜레마』 (서울: 당애, 1998); Peter Evans, *Embedded Autonomy: State and Industrial Transform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등

24) 양재진, 앞의 논문, p. 2.

한 개입이 오히려 경제적 성공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국가가 시장 원리에 부합하는 정책을 형성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존슨은 경제성장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한 발전주도형의 정치적 엘리트들이 존재하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전략을 개발하는 경우 자본주의적 발전국가(*capitalist developmental state*)를 상정해볼 수 있다고 한다.<sup>25)</sup>

위와 같이, 발전국가론의 이론적 출발점이 되는 국가에 대한 가정부터 신고전파 주류경제학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주류경제학자들에게 국가는 이권추구(*rent-seeking*)적이다. 따라서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한 자유방임주의적 최소국가에 연원을 두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국가론자들은 국가가 이권추구적 성격은 지녔지만, 국가가 고도성장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거래비용을 줄여주는 사회 내 유일한 해결사라고 여긴다. 물론 이는 모든 후발산업화과정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해결사로서의 국가, 즉 발전국가는 사회의 강력한 주도계급의 분배요구를 억누를 수 있는 국가자율성(*state autonomy*)과 장기적인 시각에서 합리적인 자원배분과 시장형성을 위한 제도를 만들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국가능력(*state capacity*)을 겸비해야 하며, 이것은 다시 발전지향적인 정치적 리더십과 결합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보았다.<sup>26)</sup>

본 논문에서는 발전국가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피터 에반스(*Peter Evans*)의 발전국가론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특히 피터 에반스가 주장한 착근적 국가자율성(*embedded state autonomy*)은 어느 다른 국가가 아니라 한국을 위시한 동아시아 국가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국가자율성이란 국가가 특정 계급의 도구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고,

---

25) 윤영관, 『21세기 한국정치경제모델』 (서울: 신호서적, 1999), p. 36.

26) 박은홍, 앞의 논문, pp. 119~123.

또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안에서 정치나 상위경제계급에 종속되지 않고 일정한 자율성을 갖는 것을 뜻한다.<sup>27)</sup> 물론, 국가자율성도 개념적으로 국가의 국내적 자율성과 국제적 자율성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국내적 국가자율성이란 국가가 지배계급으로부터 누리는 자율성인 반면, 국제적 국가자율성은 특정의 국가가 외국, 특히 주도적인 국가로부터 누리는 자율성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의 국내적 자율성에 중점을 두었다.<sup>28)</sup>

에반스는 국가의 자율성을 위해서는 관료제의 구성과 조직적 능력 및 효율성을 위한 집권화와 분권화, 국가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국가관료제의 확립을 통한 국가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sup>29)</sup> 국가능력의 개념은 국가조직구도·제도, 정책망, 전략적 능력모형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된다. 에반스는 국가능력을 국가가 주어진 과업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특정 조직구조의 존재여부를 바탕으로 조직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 이 때 주된 조직기구로서는 국가의 폭력독점기구와 경제에의 개입수단, 그리고 세금수단에서 외국차관 및 원조의 조달능력인 재정적 능력 등이 예시하고 있다.<sup>30)</sup>

발전국가의 마지막 요소인 리더십의 요건은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집행능력과 위기관리능력과 함께, 정치협상력과 행정 조정능력, 조직인사 관리능력과 자신감, 결단력 등을 들 수 있다.<sup>31)</sup> 리더십은 국가의 통수권자가 갖는 기본적인 소양으로 발전지향적이고 진취적이며, 적극적인 의지의 리더십이 국가자율성과 국가능력을 더욱더 공고히 해줄 수 있다.

---

27) 김태수, “에반스의 국가자율성 개념에 대한 연구,” 「한국 사회와 행정 연구」 제13권 제3호, (2002.11), p. 28.

28) 손호철, 『한국정치학의 새 구상』 (서울: 풀빛, 1991), pp. 42~44.

29) 김태수, 앞의 논문, p. 32.

30) 김병국, “국가구조와 국가능력 : 한국과 멕시코의 대외불균형관리정책의 비교연구,” 「한국과 국제정치」 제4권 1호 (1988,봄), p. 25.

31) 최평길, 『대통령학』 (서울: 박영사, 2002), pp. 30~61.

피터 에반스에 따르면, 이러한 국가자율성과 국가능력, 발전지향적 리더십을 갖춘 발전국가의 특징은 혁신적 투자의 유인을 제공하고, 투자의 위험도를 낮춤으로써 민간자본이 장기적인 기업가적 시각을 갖도록 유도하며, 사회적 잉여를 특정한 이해집단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국민을 위해 사용한다는 점에서 경제혁신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sup>32)</sup>

박정희정권의 한국은 이러한 발전국가의 조건인 국가자율성과 국가능력, 발전지향적 리더십이 모두 적용되었다.<sup>33)</sup> 해방이후, 자본산업의 미발달로 인해, 국가가 힘의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으며, 군부지배 하에서 필요에 의한 유능한 전문관리들이 충원됨으로써 높은 국가능력을 지니게 되었으며, 박정희의 전략적 리더십이 이와 결합하여, 한국에 발전국가적 국가성격을 갖추게 해준 것이다.<sup>34)</sup>

발전국가는 이상형적인 의미에서 종종 다른 유형의 국가와 대비되었다. 에반스는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와 약탈국가(predatory state) 그리고 중간국가(intermediate state)의 3가지 유형으로 제시하며 발전국가의 성격을 강조하고자 하였다.<sup>35)</sup> 개발도상국 중에서 국가자율성과 국가능력을 겸

32) 윤상우, 앞의 논문, p. 163.

33) 한국의 경우, 박정희시대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라는 측면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군부의 근대화, 즉 박정희시대의 경제성장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발전국가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박정희를 ‘개발독재’로 규정하는 예는 이병천, 『개발독재와 박정희시대』(서울: 창비, 2003).

34) 발전국가에 대한 또 다른 유사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찰머스 존슨은 좁은 의미의 발전국가로 “정부가 (완전고용, 수출 경쟁력, 에너지 자급 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목표들을 선도하거나 증진하기 위해 적극 개입하는 국가”이라고 보았다. 백영철 외, 앞의 책, p. 136. 김일영은 발전국가를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도 부국강병이란 목표를 위해 국가가 시장에 대해 장기적이면서도 전략적인 개입을 하는 국가’로 정의하였다. 김일영, “한국에서 발전국가의 기원, 형성과 발전 그리고 전망,”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3집 1호 (2001), p. 89.

35) 발전국가의 예는 한국, 대만, 일본이 주이며, 약탈국가의 예로는 에반스는 모부투 정권 하의 자이레,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의 아르헨티나를 들었으며, 바이스와 홉스는 아이티, 마르크스 하의 필리핀,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을 포함시켰으며, 박은홍은 “위기, 경제변화,

비한 발전국가에 비해, 문제의 해결보다는 이권추구적 속성만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국가유형을 약탈국가라 부르며, 약탈국가는 국민복지와 국민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약탈적 행위를 일삼는 국가로서, 사회로부터 거대한 양의 투자 가능한 잉여를 추출하지만 그것을 경제혁신에 필요한 집합재로 공급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네윈정권의 버마는 군부정권의 직접지배에 의한 국가자율성은 갖추었지만, 전문인력의 충원부족에 의한 국가능력의 부재와 네윈의 방관형 리더십의 영향으로 약탈국가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물론, 발전국가는 국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의미에서 약탈국가와 동일하지만 발전목표를 추진할 수 있는 자율성과 능력을 지니고 발전지향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질을 달리하는 것이다. 발전국가는 기업가적 역할을 수행한 지휘기구이며, 중앙지도기관으로서 산업의 혁신을 추진할 의사도 능력도 없는 약탈국가와는 대조된다.<sup>36)</sup> 시장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능력과 개입 정도 뿐만 아니라 시장을 선도할 의지 여부도 발전국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sup>37)</sup> 박정희정권의 한국은 경제발전을 목표로 관료제의 강력한 행정적 능력을 위해 경제기획원(Economic Planning Board: EPB)을 신설하여 초권력적 기구로 만들었으며, 특정의 사회적 압력을 오히려 압도한다는 점에서, 목표를 결여하고 전체적 지배를 특징으로 하는 네윈정권의 버마와는 대조적이다.<sup>38)</sup>

지금까지 본 단락에서는 같은 권력체제인 군부가 경제체제의 선택으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국가성격 측면에서는 발전국가와 약탈국가 유형의 차이로 인해 어떠한 경제적 성과들을 나타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발전국가와 약탈국가의 개념들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제시하였다.

---

국가의 전환”서 인도네시아를 약탈국가로 규정하였다.

36) 박은홍, 앞의 논문, p. 119~123.

37) 김일영, 앞의 논문, p. 83.

38) 김태수, 앞의 논문, p. 38.

본 논문은 이러한 개념들을 기본으로 각 군부에 의한 경제체제의 선택과 국가의 성격에 따른 상이한 경제성과의 귀결이라는 명제를 통해 네윈정권의 버마와 박정희정권의 한국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논문의 구성은 총 7개장으로 구성된다. I장에 이어서 II장에서는 버마와 한국에 쿠데타가 일어나게 된 시대 상황과 네윈정권과 박정희정권의 군부정권의 등장을 소개하고 있다. III장에서는 사회주의와 약탈국가의 특징을 나타내는 네윈정권의 경제체제와 국가성격을 살펴본 뒤, IV장에서는 자본주의와 발전국가의 특징을 나타내는 박정희정권의 경제체제와 국가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V장에서는 객관적인 자료와 도표를 이용해 네윈정권과 박정희정권의 경제성과를 비교분석하며, 경제체제의 선택과 국가성격의 차이로 인해 나타난 상이한 경제성과의 결과들을 통해 네윈정권이 퇴장하고 군부지배가 지속되는 상황을, 박정희정권이 몰락하며 문민지배가 등장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VI장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네윈정권과 박정희정권의 경제체제의 선택과 국가성격에 따른 상이한 경제성과들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 Ⅱ. 군부정권의 등장

### 1. 버마의 시대 상황과 네윈정권의 등장

#### 1) 버마의 시대적 상황

1886년 1월 1일에 영국은 버마의 영국령화를 선언해 버마를 영국령 인도의 한 부분으로 편입시키고 왕제를 폐지하였다.<sup>39)</sup> 이어 1937년 버마의 통치를 위해 영국의회는 개정 버마통치법을 통과시켜 이를 기초로 바모(Ba Maw)를 국가원수로 하고 국방장관은 아웅산, 외무장관은 우누가 맡은 최초의 연립정부를 수립하였다. 그 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일본이 육군 참모부 조도 하에 버마의 독립지원이라는 표면적 이유로<sup>40)</sup> 남기관(남기관 : 남방기업조사회)<sup>41)</sup>을 설치해 아웅산을 중심으로 “30인의 동지”가 방콕에서

39) 버마의 인도 편입은 독립 후에 버마인들의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계기가 된다. 정치적으로는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행정적으로는 인도인의 통제를 받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인의 착취를 받는 최악의 식민통치를 경험한 버마인들에게 외세의 배척은 당연한 것이었다. 이러한 식민통치구조를 E. E. Hagen은 “이중식민통치구조(doubly colonial)”이라고 개념화하였다. 한석태 외, 『미얀마의 정치와 경제-버마식 사회주의』(서울: 삼중문화사, 1991), pp. 81~82; Maung Maung, *Burma and General Ne Win*, Rangoon: Religious Affairs Dept. Press, 1968, p. 8.

40)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버마는 일본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였다. 당시 중국의 관문일 뿐만 아니라 인도로 가는 길목이었으며, 일본이 필요로 했던 석유, 쌀 등을 생산하는 풍부한 자원국이었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영국에 대한 버마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것이었지만 결국은 일본의 재식민화가 목적이었다.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연구원, 『버마 현대사』(서울: 소나무, 1989), pp. 8~9.

41) 남기관은 원래 일본군이 인도차이나 및 말레이반도 등의 점령정책인 소위 남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시 인도와 버마 등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던 영국과의 무력충돌에 대비, 버마로드 등에 관한 제반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밀특수기관이다. 김성주 외, 『동남아의 정치 리더십』(서울: 21세기한국연구재단, 1996), p. 190.

결성되도록 지원하여 버마의 식민통치 발판을 마련하였다.<sup>42)</sup> 그러나 1942년 1월 버마를 점령한 일본이 1944년 3월에 진행된 인도침공작전에서 말라리아, 정글 등의 악조건으로 패배하자 버마의 민족주의 지도자들은 일본과의 제휴가 독립에 불리하게 작용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때 버마의 민족주의자들은 1944년 8월에 범민족적인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반파시스트 인민자유연맹(*Anti-Fascist People's Freedom League: AFPFL*)을 발족하고, 아웅산은 1944년 12월 비밀리에 연합군과 접촉하기 시작하여 1945년 휘하의 버마독립의용군(*Burma Independence Army: BIA*)을 연합국 측에 가담시켜 일본군을 몰아내고 버마를 재탈환하였다.<sup>43)</sup> *AFPFL*은 1945년 3월 아웅산의 지휘 하에 일본군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고 연합군과 더불어 싸웠다.<sup>44)</sup> 1945년 이후 버마는 일시적으로 영연방에 속해 있었으며 아웅산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1947년 1월 영국수상 애틀리와 아웅산-애틀리협정을 가서명하고 이를 기초로 버마의 전 소수민족을 포함한 단일국가로서의 독립을 위해 소수민족 대표들과 “팔롱합의”를 이끌어내어 버마 연방의 기초를 닦았다.<sup>45)</sup> 그러나 아웅산 장군은 애틀리 회담에 버마 대표단 일원으로 참가하였던 우파지향적인 우소(*U Saw*)

---

42) 버마의 대영무장독립운동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였던 남기관은 일본군의 버마 점령후인 1942년 6월에 해산되었다. 그러나 버마의 독립운동사에 남기관의 공헌은 대단해, 남기관의 30인의 동지에 한명이었던 네윈은 이후 일본에 관한 각별한 친근감으로 국가원수의 자격으로 다섯번이나 일본을 방문했을 정도이다. 신봉길, 『시간이 멈춘 땅, 버마』(서울: 한나래 1991), pp. 77~80.

43) 1941년 초에 결성된 버마독립군(*BIA*)중 일본이 5000명을 선발해 버마방위군(*Burma Defence Army: BDA*)을 1942년 7월 창설하였는데, 이 군대가 오늘날 버마 군대의 근간을 형성한다. *BDA*는 1943년 8월에 “버마국민군”(Burma National Army: *BNA*)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Robert H. Taylor, *The State in Burma*. London: Orient Longman Limited, 1987, pp. 231~233.

44) 한석태 외, 앞의 책, p. 83.

45) 1947년 2월에 개최된 팔롱회의에서 아웅산은 독립 후 소수 민족에게 자치권을 주기로 약속했다.

에 의해 암살되고 말았다.<sup>46)</sup>

아웅산 장군 암살 후 우누(U Nu:일본군 전령 이진 영국의 지배당시 마지막 수상 역임)가 영국 총독에 의해 행정수반으로 지명되어 영국과의 독립 협상을 마무리 짓고 버마는 1948년 1월 4일 영연방으로부터 분리되어 버마 연방(*the Union of Burma*)으로 독립을 달성하게 되었다.

독립공화국이 설립된 후 첫번째 수상에 취임한 우누는 영국식 의원내각제의 영향을 받아 버마에 의회민주주의를 도입하고 불교를 강조하는 동시에 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등 버마의 국가건설을 위해 노력하였다.<sup>47)</sup> 그러나 우누는 리더십이 부족해 재임기간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다. 결국, 우누는 집권 초기에 공산당의 무장봉기와 일부 군대반란으로 국토 2/3가 반란군 수중에 떨어지고 집권당인 *AFPFL*의 분열<sup>48)</sup>로 사회혼란이 야기되자 군에 정권을 이양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sup>49)</sup>

1958년 10월 26일 설립된 네윈의 과도정부는 당면과제로 법과 질서의 회복, 경제적 혼란의 극복을 설정하였다. 과도정부는 법과 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소수민족과 공산당에 대한 반격을 실시하여 질서를 회복하였다. 또한 1년 4개월의 집권을 거쳐 1960년 2월 약속된 총선을 실시하였다. 1960년 2월 총선에서 청렴파 *AFPFL*의 승리로 우누는 재집권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안정파 *AFPFL*를 지지하던 군부는 우누 정부가 반란군과의 공존을 추진하자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으며, 군부에 대한 견제를 늦추지 않는 정부와의

---

4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세계비즈니스정보 : 버마」, 2001. p. 32.

47) 김성주 외, 앞의 책, pp. 193~194.

48) 1958년 6월과 7월에 서기장 인선 문제로 갈등을 빚던 우누파와 우바체파는 각각 '청렴파 *AFPFL*' 과 '안정파 *AFPFL*'을 설립하였다. 이로써 두 개의 *AFPFL*이 출현하여 양파의 추잡한 싸움은 전국적 규모로 펼쳐지게 되었다.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연구원, 앞의 책, p. 30.

49) 우누 수상은 1958년 10월부터 1960년 3월까지 17개월간 네윈에게 자발적으로 정권을 이양했다. 신봉길, 앞의 책, p. 89.

갈등이 커지면서 군부와 정부의 관계는 악화일로에 서게 되었다. 게다가 1961년의 대홍작으로 경제사정까지 악화되자 결국, 버마군은 1962년 3월 2일 새벽4시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다.<sup>50)</sup>

## 2) 네윈의 쿠데타정권 등장

버마사회의 불안으로 우누가 네윈에게 정권을 이양한 1958년 10월 28일에 네윈은 국가와 군의 분열을 막기 위한 명분으로 이를 수락하였다.<sup>51)</sup> 10월 28일 국회에서 네윈은 수상으로 취임하고 14명의 각료로 구성된 과도정부를 조직하였다. 이 과도정부는 1960년 4월까지 정권을 맡게 되었다. 1958년 10월부터 1960년 3월까지 약 17개월 동안 네윈의 과도정부는 치안회복과 물가 인하에 의해 경제안정에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정권 이양을 보장한다는 네윈과 우누의 약속으로 1960년 4월 선거가 치러졌고 우누는 다시 수상으로 선출되었다.<sup>52)</sup> 그러나 소수민족의 자치권확대요구와 여당의 내분, 경제악화 등을 해결해야 할 우누의 리더십 부족으로 버마 사회는 급속히 혼란스러워졌다.

네윈은 우누정부가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려는 것을 그대로 보지 않았

---

50) U Thaung. *A Journalist, a General and an Army in Burma*. Bangkok: White Lotus, 1995, p. 49.

51) 그러나 이 때의 네윈의 과도정부는 집권 후 정치체제에 대한 혁명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당면과제의 해결을 위한 수행만을 전념하였다고 볼 때 일상적인 정부운영에 대한 군부의 일시적 개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52) 1958년 9월 24일 우누와 네윈 사이의 정권 이양에 관한 서한에 규정된 점들은 다음과 같다. ① 1959년 4월말까지 자유롭고 공정한 총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다. ② 선거 관리 내각에는 버마 본주에 있는 정당의 당원은 입각시키지 않는다. ③ 관리와 군인의 정치 간섭을 배제한다. ④ 군인의 폭력 행위를 저지한다. ⑤ 범죄 방지와 국내치안 회복에 노력한다. ⑥ 중립 정책을 엄수한다.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연구원, 앞의 책, p. 35.

다.<sup>53)</sup> 정국이 혼란해지자 네윈과 버마군은 ‘극히 험악한 상태에 빠진 국가 정세를 수습하기 위하여’ 1962년 3월 2일 새벽 4시 쿠데타를 결행하여 정권을 장악하고 혁명위원회와 혁명정부를 수립하였다.<sup>54)</sup>

버마 연방 혁명위원회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고 부당한 이익추구가 만연해 있는 유해한 경제체도가 존재하는 한, 모든 사람은 사회악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한다고 믿는다. 버마 연방은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를 근절시키고 정의에 기초한 사회주의 경제체도를 수립하여 비로소 인종·종교의 구별 없이 모든 국민은 의식주에 대한 근심이나 의식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예정을 알 수 없다는 따위의 모든 사회악으로부터 해방되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고 풍요로운 새 사회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다. 이 신념에 따라 사회주의 사회에 도달함을 목표로 국민과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갈 것을 결의한다.<sup>55)</sup>

네윈은 1963년 4월 30일 혁명위원회의 정책 성명을 발표하여 “우리의 신념”을 발표하고 끝을 “사회주의 사회로, 버마 방식으로 나아가자”라고 맺었다.<sup>56)</sup> 혁명위원회는 우누에 의해 발표된 불교국교화정책과 소수민족의 분리독립에 대한 보장을 철회하고 “버마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면서 자본주의적인 의회민주주의를 완전히 배격할 것을 선포한 것이다. 이어, 버마군 총사령관 네윈을 의장으로 하고, 17명의 군 고위 간부로 구성된 혁명평의회

---

53) 실제 1959년 당시 네윈은 각 지구 사령관에게 ‘다가오는 총선거 결과 성립된 정당 정부가 과거의 과오를 각성하지 않고 사태가 1958년 당시와 같이 혹은 그 이상으로 악화되어 국가가 붕괴될 위기에 빠진다면 군은 국민과 손을 잡고 국가구제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연구원, 앞의 책, p. 46.

54) Guy Hunter. *South-East Asia : Race, culture, and Nati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6, p. 237. 이는 혁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쿠데타 이유로 Mya Maung, *Burma and Pakistan: A Comparative Study of Development*, New York: Praeger Publisher, 1971, p. 126; 한석태 외, 앞의 책, p. 92.

55) 혁명평의회 정책 성명의 전문은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연구원, 앞의 책, p. 196.

56) U Thaung, 앞의 책, p. 61.

(Revolutionary Council: RC)가 결성되어 1974년 ‘신헌법’ 제정으로 민정이양을 하기까지 혁명평의회는 국가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기능하였다.<sup>57)</sup>

쿠데타에 의한 네윈 정권의 등장은 의회민주주의의 종말과 군부 지배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혁명평의회는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력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행사했다. 이전의 국가기구와 지방정부는 사실상 해체되었고, 각급 군장교가 주축이 되는 치안행정위원회(Security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SAC)가 전국적으로 결성되어 국가기구와 지방정부를 대체하였다. 또한 동시에 혁명평의회는 1962년 7월 버마사회주의계획당(Burmese Socialist Program Party: BSPP)를 결성하고 1964년 3월 모든 정당의 해산을 명령하고 BSPP정당 외에 활동을 금지시켜 BSPP의 일당 독재를 추진하였다.

### 3) 군부의 정치개입 동기

네윈의 쿠데타 동기는 공식적으로 여야의 정치적 분열, 소수민족문제에 의한 민족의 분열<sup>58)</sup>, 자본주의적 의회주의의 부패, 외국자본의 침투, 문화의 타락, 교육수준의 저하, 노동자·농민계급의 경제적 피해 등을 들 수 있다.<sup>59)</sup>

---

57) 한석태 외, 앞의 책, p. 94.

58) 식민지 시절, 영국은 그들의 전통적인 식민정책인 분할 통치 정책을 바탕으로 중심부와 산간지역을 구분해서 각각을 직접 관리하여 다수족이자 주족인 버마족을 경제하고자 하였다. 이를테면 영국은 친족, 카친족, 커인족 등의 소수종족들에게는 군입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카렌족을 기독교화하여 식민군대의 근간을 삼았으나 버마족은 군입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버마족의 세력화를 최대한 억제하고자 하였다. 결국 오늘날 버마의 소수민족문제는 이러한 전통과 영국의 식민정책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겠다. 한국 엠네스티 4그룹, 『내릴 수 없는 것밭, 버마』 (서울: 두리미디어, 2000), pp. 34~35.

59) Maung Thawngmung, "Paddy Farmers and the State: Agricultural Policies and Legitimacy in Rural Myanmar,"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2001), p. 2.

그러나 직접적인 이유는 강력한 군부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부 간의 갈등에 따른 군부의 위기감 고조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독립 직후 전국 각지로 흩어져 있던 버마군 재건을 추진한 인물은 바로 네윈이었다. 남기관 등에서 활동하고 ‘30인의 동지’ 중 하나였던 네윈은 아웅산의 암살 이후 1949년 3월 신생독립국인 버마의 군 최고사령관으로 취임하고 있었다. 네윈은 곧 군의 버마화를 추진하였다. 군 수뇌부에서 네윈은 기존 군의 요직에 주둔하고 있던 카렌족 대신 군의 요직에 자신의 BIA의 옛 부하들로 배치한 것이다.<sup>60)</sup> 이들 장교들은 네윈의 충실한 측근이 되었고 이들이 버마군의 중심이 되었다. 또한 네윈은 군의 현대화를 위해 국립군사학교를 설립하였다. 이 군사학교를 졸업한 생도들 역시 버마군의 중심이 되었다. 이리하여 네윈을 중심으로 버마군 내에 의사소통 융화 단결이 유지되었으며 네윈의 의사가 곧장 말단까지 전달되는 구조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군부의 조직화, 현대화로 군부는 당시 버마정치조직에서 가장 견고하고 강력한 세력이 되었다. 또한 독립 후 버마는 반란군의 잦은 내란으로 인해 치안확보가 최우선이었으니 정부에서 네윈의 발언권이 높아지고 권위가 확대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러한 권력이 있음에도 과도정부 시기 때 네윈은 민정이양의 약속을 지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 그러나 1960년 2월 총선에서 군부가 지지하는 안정과 AFPFL가 선거에 지고 청렴과 AFPFL이 선거에서 승리해 우누에게 정권을 이양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그러자 군부는 우누정부의 기본정책인 불교국교화, 국내안정을 위한 반란군의 자치권 인정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

---

60) 우누는 네윈에 의한 설립된 국립사관학교와 중앙정보조직의 설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고, 경찰을 군부에서 독립시켜 자체 훈련권을 부여하였으며, 버마경제개발회사(BEDC)를 통해 이루어지던 군부의 경제활동을 금지시키는 등 군부에 압박을 가하였다. 한석태 외, 앞의 책, p. 92.

냈으며, 군부에 대한 견제를 늦추지 않는 정부와의 갈등이 커지면서 군과 정부의 관계는 악화일로에 서게 된 것이다.

특히 1961년 흉작으로 경제가 악화되자 네원을 중심으로 하는 버마군은 1962년 3월 2일 새벽4시에 쿠데타로 정권을 재장악했다. 네원의 3·2쿠데타는 국가의 정치·경제·사회적인 혼란이 가중되고, 군부와 정부의 갈등으로 군부의 이익이 정부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 한국의 시대 상황과 박정희정권의 등장

### 1) 한국의 시대적 상황

한국은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과 함께 독립국가로 출범했다. 1910년 조선왕조가 일본에 국권을 빼앗긴 후 1945년까지 35년간을 일제의 식민통치를 겪었으며, 1945년 8월 15일 일본 패망에 의한 독립과 함께 해방이 되었으나 독립정부를 세우지 못했다. 독립 후 질서를 잡는다는 구실로 미군과 소련이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분할 점령한 것이다. 해방 후 한국은 3년 간 미군정 기간을 거쳐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을 선포함으로써 성립되었다.

제1공화국은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식민지배의 유산을 조속히 청산하고 자주독립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일을 우선과제로 삼고 출발하였다. 또한 제1공화국은 서구선진국의 국가구조를 원용, 국가구조의 틀을 재편성하고 대통령중심의 민주공화제를 정치체제의 기본 원리로 삼았다. 그러나 이승만 대

통령의 가부장적 권위주의, 집권당인 자유당의 독선과 방만한 정국 운영, 행정부의 정치적 도구화와 관료사회의 부패로, 곧 장기독재정권으로 전락하고 말았다.<sup>61)</sup> 1960년 3·15 부정선거로 인해 이승만 독재정권에 대한 대규모 반독재 투쟁인 4.19혁명이 일어났으며, 결국 이승만은 26일 하야성명을 발표하고 다음날 권좌에서 물러났으며 5월 29일 하와이로 해외망명을 떠남으로써 제1공화국은 막을 내렸다.<sup>62)</sup> 이승만의 장기독재정권이 1960년 4.19혁명에 의해 무너지고 민주당 주도의 제2공화국이 등장했으나, 이듬해 5월 박정희의 군사쿠데타로 막을 내렸다. 박정희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 2년 간 군정을 실시한 후 1963년 자신의 주도 하에 민정이양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제3공화국을 출범시켰다.

## 2) 박정희의 쿠데타정권 등장

1961년 5월 16일 새벽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국가의 행정 · 입법 · 사법의 3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이어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군사혁명위원회 이름으로 6개 항의 혁명공약을 발표했다.<sup>63)</sup> 장면 국무총리

61) 김호진, 『한국정치체제론』 (서울: 박영사, 1997), pp. 278~280.

62) 당시 이승만의 하야는 미국의 압력이 결정적이었다. 1959년 12월 부임한 주한 미대사 매카너기 (Walter P. McConaughy)는 시위가 확산되자, 3차례 면담을 가졌는데, 4월 26일 마지막 면담에서 매카너기는 이승만에게 하야를 종용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김일영, 『건국과 부국 : 현대 한국정치사 강의』 (서울: 생각의 나무, 2004), pp. 277~281.

63) 혁명공약은 다음과 같다. ①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②'유엔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③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품을 진작시킨다. ④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구경제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⑤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의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⑥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부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하신기, 『박정희』 (서울: 세경사, 1997), p. 229.

는 쿠데타 3일 만에 은신하고 있던 혜화동 칼멜 수녀원에서 나와, 제2공화국의 마지막 각의였던 제69차 임시각의를 주재, 계엄령의 추이와 내각 총사퇴 및 군사혁명위원회로의 정권이양을 결의했다. 5·16쿠데타가 성공한 것이다.<sup>64)</sup>

5월 18일에 장면 내각이 총사퇴하자 군사혁명위원회는 ‘혁명위원’ 30명과 고문 2명을 선출하고 19일에는 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 발족하였으며, 7월 박정희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에 취임하였다. 이어, 박정희는 1963년 7월 27일 연내민정이양을 다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당연히 정치활동도 자유화했다. 정당의 창당과 이합집산이 다시 본격화했다. 박정희 자신도 8월 30일 전역과 함께 민주공화당에 입당했다.<sup>65)</sup> 그리고 다음날에는 공화당 대통령후보 및 공화당 총재지명을 수락했다. 혁명과업을 완수하고 원대 복귀하겠다는 ‘혁명공약’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1963년 10월 15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개표결과는 박정희(공화당)가 470만 2,640표를 획득, 454만 6,614표를 얻은 윤보선(민정당)을 15만여 표 차이로 어렵게 이겼다.<sup>66)</sup> 제5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정희는 1963년 12월 17일 취임했다. 이로서 제3공화국시대가 열렸다. 이 날 개정헌법이 발효되고 제6대 국회도 개원되었다. 박정희의 제3공화국의 특징은 쿠데타 정권의 연장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식상으로는 제1공화국 헌법체제를 승계함으로써 적어도 형식에 있어서는 민주적이라 할만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

64) 박정희가 민정이양 후 다시 쿠데타로 재집권하겠다는 생각들을 갖게 된 것은 버마에서 네 윈이 1년 전 제2차 무혈 쿠데타를 성공시킨 사례가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보는 이도 있다. 강성재, 앞의 책, p. 49. 실제로 박정희의 “국가와 혁명과 나”에선 1960년대 군사쿠데타가 일어난 국가들을 소개하는 부분들이 있다. 박정희, 『국가와 혁명과 나』(서울: 지구촌, 1997), pp. 159~207.

65) 박정희 시대의 집권여당이었던 민주공화당에 대한 내용은 신명순, 『한국정치론』(서울: 법문사, 1993), pp. 68~105.

66) 이진곤, 『한국 정치 리더십의 특성』(서울: 한울, 2003), pp. 183~185.

는 권위주의적 정권의 연장이었다.<sup>67)</sup>

### 3) 군부의 정치개입 동기

하루속히 자주경제를 확립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제1차적으로 경제전에서 공산 북한을 이겨내고, 최소한도나마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실현, 행세하였어야 하겠다. 다시 여기서 거듭 말하거니와, 혁명은 이 같은 경제적인 사명감에서 거사되었던 것이다.<sup>68)</sup>

5·16군사혁명의 핵심은 민족의 산업혁명화에 있었다는 것을 재강조하고 싶다..... 먹여놓고, 살려놓고서야 정치가 있고, 사회가 보일 것이며, 문화에 대한 여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sup>69)</sup>

박정희가 5·16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이유는 경제적인 면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박정희는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구경제재건에 총력을 경주’하고 싶다고 말했다. 4·19혁명 이후 민주당이 집권하였으나, 민간정치지도자들의 정치지도력 부족으로 정국은 분열과 파쟁으로 치달았으며, 국민경제생활은 절대 빈곤에 빠지고 말았다. 민간정부가 이와 같은 정치적 불안정, 경제적 침체 및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지 못하자, 군부는 국가위기의 심각성을 절실히 느끼고 국가발전을 위해 군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정치개입의 정당성을 시사한 것이다. 박정희 자신도 민간정부가 무능하여 국가위기를 초래케 하고, 결국 국가발전을 크게 저해한다고 보고,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군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sup>70)</sup>

---

67) 이진근, 앞의 책, pp. 171~183.

68) 박정희, 앞의 책, p. 75.

69) 박정희, 앞의 책, p. 265.

70) 이대규, 앞의 논문, p. 188.

그러나 5·16쿠데타의 원인이 이러한 정치·경제·사회적인 문제인식 외에 군부 자체에 인식을 두는 시각도 있다.<sup>71)</sup> 한국군은 1946년 1월 15일 창설된 국방경비대를 모체로 발족하였으며, 1948년 건국과 더불어 재편되어 6·25전쟁과 그간의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거대한 규모로 급성장했다.<sup>72)</sup> 특히 미군의 지원으로 1955~60년간 총군사비의 80%를 원조 받은 한국군은 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한국사회의 조직들 중 가장 현대적인 조직집단으로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과 발언권은 그만큼 강화되었다.<sup>73)</sup> 그러나 이러한 군의 비대화 속에 정군파와 만주군 출신 비주류파를 중심으로 한 군부의 파벌주의가 심화<sup>74)</sup>되고, 진급정체 현상의 심화<sup>75)</sup>에 따른 경비사 및 육사 8

71) 한용원, “5·16쿠데타의 발생과 전개과정”에서 5·16쿠데타의 발생원인을 사회, 정치적 상황인 유인요인(pull factor)과 군 내부의 인적, 조직적 상황인 촉발요인(push factor)으로 구분하고, 이 두요인의 결합에 의한 쿠데타의 성공을 설명하고 있다. 유인요인은 ①정부의 권위 상실, ②사회, 경제적 위기의 심화③정치세력의 양극화 ④시민저항의 부재를, 촉발요인으로는 ①파벌구조의 형성 ②신직업주의의 성장 ③조합적 이익의 침해 ④개인적 야심과 불만을 들고 있다. 한용원, “5·16쿠데타의 발생과 전개과정,” 한배호 편, 『한국현대정치론Ⅱ』(서울: 오름, 1996), pp. 43~47.

72) 미군정기간 중 ‘뱀부계획(Bambo Plan)’을 통해서 1946년 1월 14일 남조선 국방경비대로 출발한 한국 군부는 1950년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다. 즉, 규모면에서 한국전쟁 직전 113,000명에 불과했던 것이 1953년에 가면 650,000명으로 급격한 양적 팽창을 이룩한 것이다. 홍철, 『군부정치개입의 이론과 사례분석』(서울: 중문, 2005), p. 5.

73) 김호진, 앞의 책, p. 363.

74) 1950년대 한국군은 중국출신, 일본육사출신, 만주출신 집단 등으로 파벌을 형성하고 있었다. 특히, 만주출신집단은 평안도파와 함경도파가 군 파벌의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었다.

75) 박정희는 1940년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했다. 곧이어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1944년 졸업과 동시에 일본군 육군소위로 임관되었다. 1945년 해방이 되자 고국으로 돌아온 박정희는 1946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소위에 임관되었으나, 군인으로서의 그의 앞길은 순탄치 않았다. 1948년 남로당에 가입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박정희는 군사재판을 거쳐 결국 1949년 1월 강제예편되는 수모를 당했다. 그 후 문관으로 육군정보국에 근무하던 중 6.25가 발발하자 1950년에 소령으로 복귀했지만, 당시 그가 받은 자존의 상처는 권력동기를 유발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또한 1957년에야 소장으로 진급되니 이는 박정희의 좌익전력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대장진급은 아예 불가능 하다는 좌절감을 느끼게 했던 것이다. 따라서 박정희는 이러한 좌절 콤플렉스와 한계상황을 극복하는 길은 쿠데타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김호진, 앞의 책, p. 363.

기의 불만이 증대되는 와중에 장면정권이 10만 감군을 계획해 군부가 폭발했다는 것이다.<sup>76)</sup>

이를 종합해 보면, 박정희의 5·16 쿠데타는 국가의 정치·경제·사회적인 혼란을 극복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군부 내의 갈등 해소 측면에서 돌파구를 찾던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76) 한용원, 앞의 책, pp. 48~52.

### Ⅲ. 네윈정권의 경제체제와 국가성격

네윈정권의 정치적인 시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기는 1962년 쿠데타 이후 1974년 신헌법에 의해 민주정이 설립된 시기, 2기는 1974년부터 1988년 민중봉기에 의해 네윈이 물러나고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State Law and Order Restoration Council: SLORC)정부가 정권을 잡을 때까지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1962년 버마식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수립한 이후, 1974년의 신헌법에 의해 버마식사회주의의 수정이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는다. 그러나 버마의 경제는 여전히 사회주의경제체제를 선택하고 유지했다.

#### 1. 경제체제와 경제정책

##### 1)1기(1962~1974) : 버마식사회주의

1962년 군사쿠데타로 등장한 네윈은 ‘버마식 사회주의’(the Burmese Way to Socialism) 경제체제를 수립하였다. 버마의 실정에 맞추어 스탈린식 사회주의 경제모델과는 달리, 집단농장을 형성하지 않고 농업의 착취를 통한 산업화에 기반을 두고 있는 네윈만의 사회주의적 자립경제모델을 확립한 것이다.<sup>77)</sup>

---

77) 갈통(J.Galtung)에 의하면 자립이란 한 나라의 국민경제가 다른 국가들과 대등한 관계 아래서 자족성을 높여가는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자립은 지방적이고 국가적인 수준에서 대중의 광범위한 참여에 의해서 자원동원과 배분의 자율적 관리를 통해 평등을

버마식 사회주의의 등장은 버마가 장기간 영국의 식민지배를 당했고, 특히 상공업 계통의 경제는 이민족이 장악하고 있었던 역사적 경험으로 비춰볼 때 이해가 가능하다. 버마에 부자는 있지만 버마인 부자는 없도록 만든 상황에서, 정치적 자립요구와 사회혁명의 요구가 외국인에 대한 민족주의적 저항과 부자에 대한 빈민의 저항과 함께 동전의 양면을 이루면서 버마경제 전반에 전개되어 사회주의발전의 길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sup>78)</sup> 초기에 버마식 사회주의는 네윈에 의해 구상된 사회주의 제도의 원리로, 다수의 복지를 위하여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공유의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얻어진 이익을 전원이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목표는 특정그룹, 특정조직, 특정계급의 이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의 인간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모든 사람에 대한 생활보장과 도덕의 향상을 실현하고 모든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sup>79)</sup>

이 선언에서 나타난 것처럼 네윈의 사회주의는 식민지 유산을 타파하고

---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른 재화의 생산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아민(S.Amin)이 자립을 자본, 자원, 노동력, 시장, 기술의 장악 아래 국민경제의 자기완결적 재생산구조를 확립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임현진, 『제3세계연구』(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p. 68.

78) 버마가 공식적으로 사회주의의 지향을 선언한 것은 아웅산(Aung San)이 1947년 소렌토-빌라회의(Sorento-Villa Conference)를 통해 사회주의 체제를 확립할 것임을 천명한 이후부터이다. 이는 독립 후에 우누(U Nu)와 반파시스트인민자유연맹(AFPFL: Anti-Facist People's Freedom League) 주도의 온건한 의회사회주의로 연결된다. 결국 초기의 버마에서의 사회주의는 제국주의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정치적 통합의 기반이었고 동시에 경제자립을 통해 자국민의 번영을 약속하는 대안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Kyi May Kaung, "Modernization, Breakdown and Structural Configurations: Retrogression in Burma(1962-88,"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4), p. 6.

79) The Burmese Way to Socialism 선언의 전문은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연구원, 앞의 책, pp. 196~202.

버마인 스스로 경제실현을 장악하여 민족주의적인 경제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들을 취해왔다. 이 목표는 두 개의 방향에서 추구되었는데, 하나는 독립 후에도 광공업, 상업분야에서 경제기반을 구축하고 있던 외국인의 경제 지배를 배제하고 버마인 자신의 경제복원을 꾀하는 것, 또 하나는 신식민주주의의 침투를 막아 다시는 외국의 지배를 받지 않는 대외적으로 자립경제를 창출하는 것이었다.<sup>80)</sup> 이러한 국내경제에 대한 계획과 자본주의적 병폐척결,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동원, 생산관계의 재정립과 내수시장의 확보에 역점을 두면서 근대세계로 이행해 나가자 했던 버마식사회주의의 국유화와 자급자족노선은 그 나름대로의 설득력과 효용성을 갖고 있어 그 성공가능성에 많은 기대를 갖게 하기 충분했다.

혁명위원회는 버마식 사회주의를 농업개혁과 국유화, 대외자립정책으로 제도화하였다. 이 계획들은 당시 인텔리들과 AFPFL의 무능한 사회주의 정책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던 정치인들에 의해 지지를 받았다. 우선, 1963년에서 1965년 사이에 모든 국가와 산업, 그리고 다른 모든 부분이 국유화되었다. 강력한 국가의 통제 하에 대부분의 기업가들은 인도와 중국으로 도피하였다. 결과적으로 수백, 수천 명의 인도와 중국인 사업가들은 모든 것을 잃고 나라를 떠나게 된 것이다. 그들이 남기고 간 사업들은 모두 국가가 소유하였다.

외국인들 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인과 자본가들의 토지와 사적 이익도 군인들에게 재분배되었다. 그러나 군인들은 모든 사업들을 소유하였지만, 그것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나 지식을 습득하지 못했다. 따라서 사업은 상당히 부진하게 되었다. 직원으로 남아있던 기술자조차도 새로운 보스에 대해 위협을 느꼈으며, 얼마 안 되는 기술자들도 그들의 능력을 이용할 수 없다

---

80)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연구원, 앞의 책, pp. 77~78.

는 것을 알고 버마를 떠나기 시작했다. 더욱이 혁명위원회는 이러한 전문가들이 떠나는 것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다. 때문에 산업은 점점 더 황폐해졌다. 버마는 1950년대 공업생산은 말레이시아와 태국을 앞섰으나, 1964년 이후로는 꾸준히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군부의 지배는 농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토지개혁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농민들이 토지소유를 잃게 되었으며, 그나마 소득이 되는 쌀도 시장가격 아래로 정부에게 팔게 되었다. 새로운 농업개혁에 실망한 대부분의 농민들은 그들이 재배하는 쌀보다, 더 많은 쌀을 매점매석하고, 이를 암시장에서 은밀히 물물교환 하거나 팔게 되었다. 쌀수출은 버마에서 외국 교역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쌀수출은 1963년 180만 톤에서 1968년 30만 톤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이것은 정부가 초기에 생각한 농업 이익을 통한 내수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산업화와 농업생산은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었다. 네윈은 쌀값의 자유화 대신 기계와 다른 것들을 포함해 수입 중지라는 방식으로 더욱더 내수에만 몰두했다. 이러한 방법은 농업발달을 더욱 악화시키게 되었다.

초기에 버마식 사회주의의 일환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사람들이 날마다 필요한 생필품을 보조금으로 살 수 있게 하였다. 처음에는 상점에 물건이 잘 보급되었고 정부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가격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내수산업과 농업생산의 악화로 가장 기본적인 생필품의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게 되자 날마다 사람들은 식량배급줄을 서야 했다. 협동조합이 제 기능을 못하자, 태국이나 이웃나라들에게서 가져온 물건을 중심으로 암시장이 점점 확산되었다.<sup>81)</sup>

처음부터 네윈의 버마식 사회주의는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체계’(The

---

81) Christina Fink, *Living Silence: Burma under Military Rule*, (London: Zed Books, 2001), pp. 31~33.

System of Correlation of Man and His Environment)라는 다소 추상적인 철학적인 개념을 도입하고 정통적인 불교복지국가(A Buddhist Welfare State)라는 개념으로 사회적 요구의 이상과 동일시하여 기본적으로 국가의 기능을 버마 민중들로 하여금 궁극적 구원의 기회를 가능케 해줄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을 확립하는데 있다고 보았다.<sup>82)</sup> 따라서 버마식 사회주의는 버마의 전근대성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과학성도 갖추지 못한 무정형한 이념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러한 이념의 경직성과 모호함으로 사회주의의 추구라는 추상적 과제와 복지의 확대라는 구체적 목표를 실행한다는 현실 사이의 격차를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1974년 네윈은 자신의 버마식 사회주의의 모순을 인식하고 이를 수정하게 된다.

1962년에서 1974년 동안 버마식 사회주의의 경제체제를 대표했던 농업화, 국유화, 자립경제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 ① 농업화

버마의 경제는 농업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농업의 비중은 전체 국민 총생산에서 절반을 훨씬 넘고 농산물의 수출은 전체 수출액에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버마경제의 중요한 축적자원 및 잉여생산물은 대부분 농산물의 수출을 통해서 조달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쌀, 티크재, 두류 등이 주종을 이루며 특히 쌀의 생산이 가장 비중이 크다, 즉 벼생산, 쌀수출, 쌀의 국내소비가 버마의 경제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버마에서 농업은 국유화되지 않았지만 네윈정권 이후 농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소작법’,

---

82) David I. Steinberg, *Burma : A socialist Nation of Southeast Asia*, (Colorado: Westview press, 1982), pp. 42~44.

‘공출제도’ 등으로 매우 강화되었다<sup>83)</sup>

1963년 “논을 경작하는 사람만이 논의 경작원이 있다”는 혁명평의회 이념에 근거하여 만든 ‘소작법’(Tenancy Act)은 비농민인 지주가 소유하는 농지 및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가운데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을 수용하여 이것을 토지를 갖지 못한 경작가에게 재분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의 재분배는 결과적으로 자작농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하고 농민은 토지위원회에서 경작원을 부여받는 형태가 되었다. 농민은 농지의 자유로운 처분, 저당설정, 임대차 등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게 되었다.

- 1) 모든 농지의 임대차에서 지주는 소작인을 선발할 권한이 없다. 소작인의 소작인에게 배분은 해당지역의 토지위원회가 한다.
- 2) 소작료의 현물지급을 금지한다.
- 3) 소작료의 상한을 책정한다.

국가가 농지의 소유권을 갖고 농민은 경작권만을 갖는 토지개혁과 함께 중요한 정책은 ‘공출제도’이다. 공출제도는 외국상인의 농산물 거래지배를 제거하며, 농산물 수출에서 얻은 이익을 국가의 주요한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두 가지의 목적에서 정부가 농산물 거래의 독점과 가결을 통제하는 제도이다. 이 목적을 위해 설립된 것이 국가농산물판매청(State Agriculture Products Marketing Board: SAMB)이다. 그러나 SAMB가 쌀거래를 독점하는 부분은 수출용뿐이고 국내소비미의 거래는 민간업자의 수중에 있었다.

그러나 곧 유통부문의 국유화로 쌀과 주요한 농산물의 국내민간거래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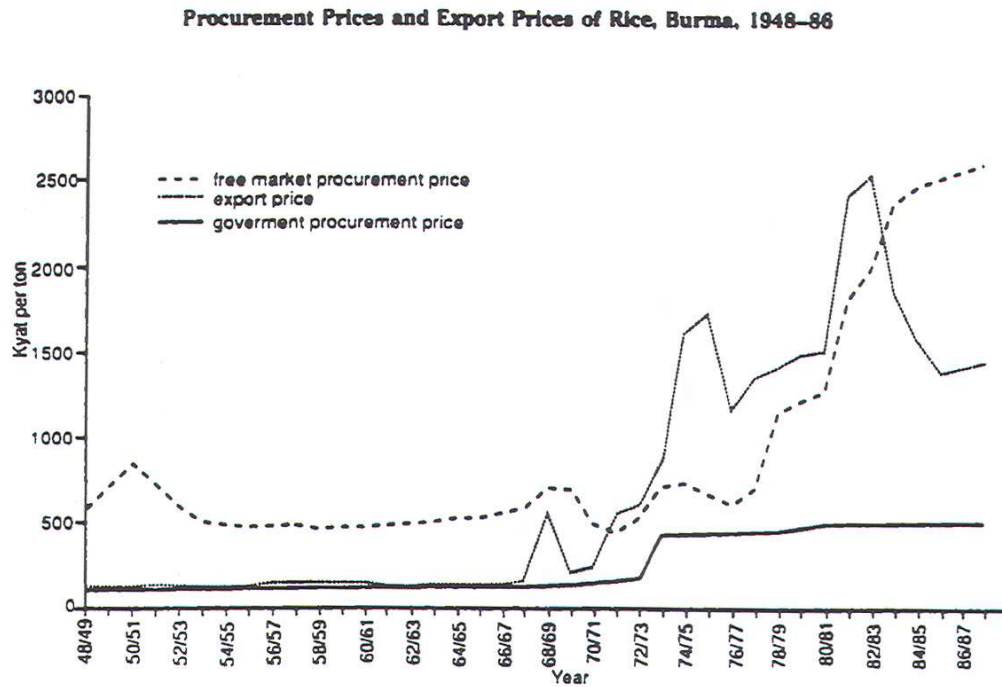
83) 전병유, “미얀마의 경제개발과 경제동향,” 한석태 외, 『미얀마의 정치와 경제: 버마식 사회주의』 (서울: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1), p. 173.

금지되었다. SAMB는 버마 연방농산물판매청(Union of Burma Agriculture Marketing Board: UBAMB)으로 변경되었고, UBAMB은 전국에 쌀매상센터를 설치하여 쌀을 집하였다. 동시에 쌀을 비롯한 주요농산물을 소작하는 농민은 수확의 일정비율을 국가에 공정가격으로 납부하는 의무를 지웠다. 쌀의 경우 단위당 토지의 평균수확량과 경작면적을 척도로 하여 작성한 공출표가 있어 농민은 이 공출표에 따라 송출량을 매년 수확 후에 정부의 매상센터에 납부하였다. 버마정부는 쌀공출제도의 철저한 운영을 위해 모든 조직을 동원했다. 그 결과 공출제도는 토지제도에 비해 전국적으로 철저하게 실시되었다. 농민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여 농업부문의 잉여를 최대한 수취하고자 한 것이다.

정부는 농업투입물(비료, 농약, 농기구, 농기계 등)의 배급, 농업신용의 공여, 토지의 양도나 이용 등을 통제하면서 미곡수집량을 각 농가에 강제로 할당하였고 이를 국제시세의 약 반값에 사들였다, 강제로 공출된 미곡 중 일부는 도시 노동자나 쌀이 부족한 지역에 배급되었고 나머지는 수출하였다. 공출제도는 잉여농산물을 수출하여 그 자금으로 자본재나 원자재를 수입하여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축적원이었다. 이 원리는 쌀 가격에 공출하여 국제시장에 비싼 가격으로 팔아 그 차익을 국가의 재정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sup>84)</sup> 때문에 공출가격은 미곡 생산비용을 겨우 상회하거나 밑도는 선에서 결정되었으므로 농민의 의욕은 감퇴할 수밖에 없었고, 장기적으로는 농업부문의 정체를 가져왔다. 이와 아울러 미곡에 대한 암시장이 형성되어 도시지역이나 쌀이 부족한 지역의 주민들은 생계에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는 나중에 대중봉기에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sup>85)</sup>

84) 이병승, “버마 사회주의 경제의 정체성 : 농업정책을 중심으로,” 「동남아연구」 제1권 (1991.12), pp. 186~190.

<그림-1> 버마의 쌀수출가격과 매상가격 (1948-86)



출처 : Maung Thawngmung, 앞의 책, p. 83.

85)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연구원 편, 앞의 책, pp. 86~96.

<표-2> 버마의 공출가격과 수출, 암시장가격의 비교 (단위: 짜트)

연도	공출가격 (쌀/톤당)	수출가격	공출가격 (벼/천바스켓당)	암시장가격
1964	261	470	322	322
1965	261	484	322	320
1966	282	514	347	500
1967	285	573	351	1400
1968	300	696	369	1329
1969	300	663	369	924
1970	300	411	369	508
1971	300	400~401	369	587
1972	309	432~488	381	1121
1973	355	-	438	1544
1974	487	-	600	1631
1975	-	-	900	1881

출처 : 노부요시, “네윈정권의 개발정책과 경제실적,”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앞의 책, p.90,94.

버마는 2차 세계대전 전에는 생산량의 2/3에 달하는 300만 톤 이상의 쌀을 수출한 적이 있는 세계 최대의 쌀 생산국이었다. 전쟁 이후 네윈은 버마 식사회주의에 의한 발전을 지향하였지만 쇄국정책 때문에 경제가 정체하고 농업생산도 침체에 빠져 쌀의 수출량은 대폭 감소하여 1966년에는 110만 톤으로 감소하고 1975년에는 30만 톤이 되어 버마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sup>86)</sup>

8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의 주요국별 쌀 생산 및 교역 현황」, 1992. p. 108.

<표-3> 버마의 쌀수출

연도	백만톤
전쟁 전	3.1
1947	1.3
1950	1.4
1955	1.9
1961	1.6
1962	1.7
1964	1.4
1966	1.1
1968	0.3
1972	0.6
1975	0.3
1976	0.7
1980	0.7
1983	0.8
1985	0.5
1987	0.5

출처: Josef Silverstein, *Independent Burma at forty Years: Six Assessments*,  
(Ithaca: Cornell Southeast Asia Program, 1989), p. 47.

<표-4> 버마의 벼생산과 쌀수출 (단위: 백만헥타르, 백만톤)

연도	과종지역(백만헥타르)	벼생산 (백만톤)	쌀 수출(백만톤)
1958	4.087	6.882	1.410
1960	4.217	7.085	1.722
1963	5.048	7.667	1.712
1966	4.989	6.531	1.128
1967	4.939	7.646	0.540
1970	4.975	8.033	0.640
1973	5.089	8.600	0.146
1988	4.778	13.200	0.047

출처: Maung Thawngmung, 앞의 책, pp.97~98.

공출제도로 인한 암시장의 형성과 농민들의 불만은 농산물의 정부집하의 저하를 야기시켰고 농업으로 재정을 확보하려던 버마식사회주의 계획은 실패하였다. 결국 수출수입 및 정부재정의 감소를 가져왔고 이를 수입제한으로 메우려다 보니 수입원자재의 부족, 국제수지의 악화, 산업투자의 부족, 인플레이 소비재부족, 생산의 정체, 실업의 증가 등 만성적인 경제침체가 꼬리를 물고 늘어졌다.<sup>87)</sup>

87) 네윈은 농업을 강조했지만, 농업부문에 대한 개발을 계획하지는 않았다. David Steinberg에 따르면 네윈정부의 초기 10년 동안 개발정책 중 농업은 사실상 강조되어지지 않았다. 농업에 대한 공공설비투자는 1964/65에는 11.3%였으나 1970/71에는 4.4%로 낮아진 것이다. David I. Steinberg, 앞의 책, p. 84.

## ② 국영화

외국인의 경제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버마인들의 일반적인 정서와 군사정부의 물리력을 통해 외국기업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버마 토착자본가의 단기적인 기대와 호응 속에서 네윈 정부의 국유화정책은 손쉽게 진행되어 갔다.

<표-5> 군부집권 이전과 이후의 국유화 비중비교

	1961/62		1974/75	
	국영부문	민영부문	국영부문	민영부문
총 계 (%)	24.8	74.8	33.3	65.1

출처: 한석태, 앞의 책, p. 173.

1963년 “기업국유화법”(Enterprise Nationalization Law)과 “사회주의경제 건설보호법”(Law to Protect the Construction of the Socialist Economy from Opposition)을 제정하여 영국인, 인도인, 중국인 등 외국인 소유의 대기업을 몰수한 결과 총 15,000여개의 기업이 사회주의건설위원회(Socialist Economy Construction Committee: SECC)의 통제 하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22개의 외국은행도 국유화하여 인민은행의 단일은행제도로 통합시켜 나갔다. 또한 네윈 정부의 통제경제정책은 인민상회(People's stores)를 통해 가격통제와 도·소매 판매할당 등 유통을 장악해 나갔고, 대외무역은 미얀마 수출입회사(Myanmar Export-Import Corporation: MEIC)의 통제 하에 두

도록 하였다.<sup>88)</sup> 그러나 버마식사회주의의 국유화정책은 버마경제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부문을 제외함과 동시에 자작농에 의한 소농민경영을 목표로 삼은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버마식사회주의의 국유화조치는 한정적인 것이었다.<sup>89)</sup>

생산 수단을 국유화하고 그것을 국영 기업으로 재편성한 것은 네윈 정권이 추진해 온 중심적인 개혁이었다. 즉 경제 전반을 통제함으로써 국영기업을 핵심으로 한 계획경제를 추진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수립을 향한 이 정권의 가장 주요한 목표였다. 그러나 일이 목적인 바대로 추진되었는지는 별개라 하더라도 현실은 완전히 그 반대다. 첫째 바로 국영 기업이 계속하여 업적부진, 취업률 저하 등에 빠져 그 역할을 다할 수 없었다. 둘째 국영기업을 우선하는 발전 정책을 취하였기 때문에 버마 경제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 민간 부문의 정체를 가져 왔다.<sup>90)</sup>

국영 부문이 업적 부진에 빠진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기업 경영의 문제이다. 국영기업 경영을 기본적으로 군이 맡았는데, 경제경영에 대한 실무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군인에게서 순조로운 기업 경영을 기대할 수 없어 결국 이전의 기업가를 고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둘째로 계획경제를 추진함에 있어 국유화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데 비해, 행정면의 계획수행 능력은 이를 따르지 못했다. 셋째로 자본이 부족하여 투자계획이나 자본재, 원자재의 수입이 계획만큼 실행될 수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계획경

---

88) 국유화의 진전 상황을 보면 1974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전력, 통신, 사회 행정, 서비스 분야는 100%국유화되었으며, 국민 총생산액 중 금융 분야의 국유화율은 99.2%, 광업은 83.7%, 서비스 60.1%, 건설은 55.2%에 이르렀다. 반면 농업 및 축산업과 임업 분야는 국유화율이 1% 미만으로 국유화 대상에서 거의 제외되었으나, 국가 공출 제도 등을 통해 농민에 대한 직접 통제를 실시하게 된다. 신봉길, 앞의 책, p. 95.

89) 김성주 외, 앞의 책, p. 136.

90) D.R. SarDesa., *Southeast Asia - past& present*, (Bangkok: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O.S. Printing House, 1997), pp. 237~238.

제의 담당자가 되어야 할 국영기업이 계속 부진함으로써 국가주도형 개발 정책에 중요한 장애가 되었다.

국유화 정책이 가진 또 하나의 문제점은 민간 부문의 정체를 초래한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국유화가 진행된 비농업부문에서도 생산액이나 고용, 사업장 등에서 민간 부문이 차지했던 비율은 여전히 꽤 높았다. ‘버마 사회주의로의 길’에서도 ‘국가의 생산력에 공헌한 사기업은 공정하고 정당한 제약 아래에서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여 그 존재를 용인하고 있다. 그러나 네윈정권은 이 시기에 민간기업에 대한 적절한 진흥 정책을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강압적으로 행동해 왔다. 예컨대, 1963년 2월의 신경제 정책 중에서 공업에서는 이후 새로운 민간기업의 설립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것과 앞으로는 민간 기업도 국유화한다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 시기의 개발 정책을 보아도 그 발전의 우선순위는 명백히 국영기업에 주어졌다. 예컨대, 수입된 자본재, 원자재는 한결같이 국영기업에 주어졌고 국영은행의 용자도 공공 부문이 중심이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외국 무역은 수출입 모두 완전한 국가 독점이었기 때문에 민간 기업은 자유롭게 다른 나라와 교역할 수 없었다. 또한 외국 기업과의 합작 사업도 거의 전면적으로 금지되었다. 이러한 정책이 민간 부문의 활력을 저하시켰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이 시기에 나타난 비농업 부문의 정체는 민간 부문의 정체가 한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sup>91)</sup>

---

91)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연구원, 앞의 책, p.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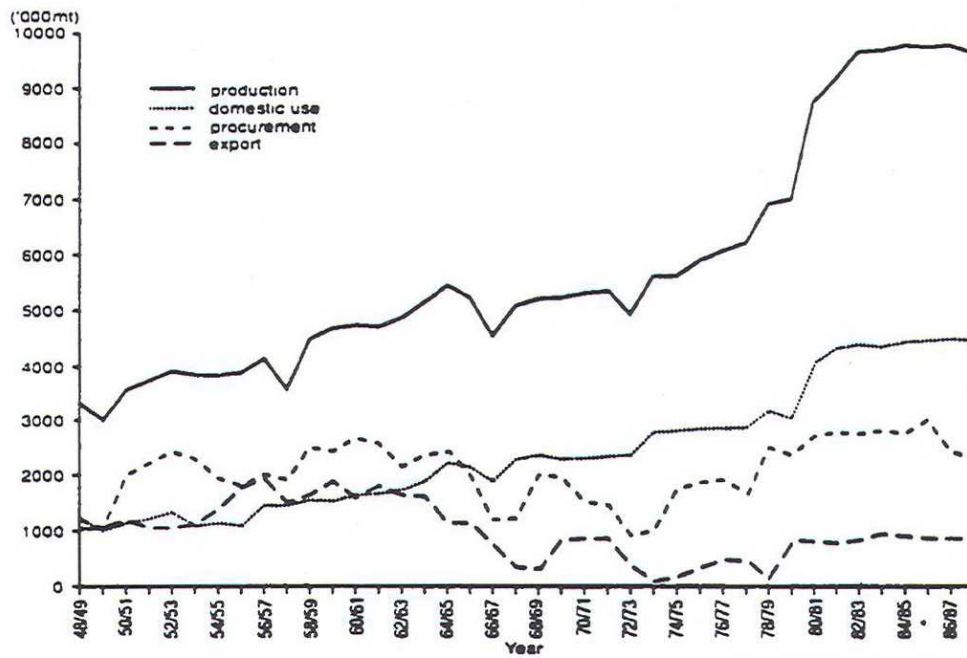
### ③ 대외무역정책

신식민지주의의 침투를 막고 자립경제를 창출하기 위해 대외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지극히 폐쇄적인 정책을 취해 왔다. 정부 대 정부 및 국제기관으로부터 들어오는 차관을 대폭 삭감함과 동시에 외국 기업의 경제 활동, 예컨대 합작사업이나 직·간접 투자 등을 거의 전면적으로 금지했다. 다른 나라와의 경제 교류 뿐 아니라 인적 교류나 외국 문화의 유입도 제한하였다. 내원 정권의 외교정책은 엄격한 비동맹중립노선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시기는 쇠국주의라 불릴 정도로 배외주의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에 따라 개발정책으로는 당연히 자력에 의해 개발을 지향하였다. 그러나 수출, 특히 쌀수출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이 정책은 오히려 경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결국, 자립갱생의 원칙에서 농업부문의 잉여농산물을 공업부문으로 전용하여 자본축적과 경제개발을 추구하려던 계획이 실패하며 경제적 침체가 장기화되자 당국은 ‘버마식 사회주의’의 정책적 수정을 도모하게 되었다. 경제 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은 물론 군부 내부로부터의 상당한 도전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그림-2> 버마의 쌀생산량, 정부매상량, 국내소비량, 수출량 (1948~87)

**Production, Procurement, Export, and Domestic Use of Rice, Burma, 1948-87**



출처 : Maung Thawngmung, 앞의 책, p. 84.

## 2) 2기(1974~1988년) : 버마식사회주의의 수정

1960년대 군사쿠데타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군부는 기존의 정치적, 경제적 지배체제에 변화를 꾀하였다. BSPP는 1971년 6월에 제1차 전당대회를 열어 이제까지의 간부정당에서 형식적으로는 민주적 집권체제로 바꾸는 내용의 헌법을 기초하고 국민투표를 통하여 90%의 압도적인 지지로 이를 확정하였다.<sup>92)</sup> 이 신헌법에 의해서 네윈은 형식적이거나 12년간의 군정을 종식시키고 1974년 3월 자신을 버마사회주의연방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인민의회(the People's Assembly)를 전면에 내세웠다.<sup>93)</sup> 그러나 군정종식과 때를 맞추어 그 동안 누적된 사회 각계각층의 불만이 시위와 반정부 운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1981년 네윈은 건강상의 이유로 우 산유(U San Yu)에게 대통령직을 이양하고 자신은 BSPP당 의장직에 머물렀으나 모든 실질적인 권한을 계속하여 그가 장악했다.<sup>94)</sup>

1971년 BSPP는 정치적인 변동과 발맞추어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경제 개혁을 시도하였다.<sup>95)</sup> 1974년 신헌법 20조에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위해가 되지 않는 사기업의 존재와 활동을 법률에 의거해서 허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버마식사회주의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 조항은 1977년 법률12조 ‘사기업의 권리보장(Rights of Private Enterprise)으로 명문화되었다.<sup>96)</sup>

이러한 버마식사회주의의 수정은 1970년대 버마에 새 희망을 주었다.

92) Guy Hunter, 앞의 책, p. 239.

93) Jayshri H. Patel, "A Burkean Analysis of Aung San Suu Kyi's Leadership Role in Political Development of Burma," (MA Thesis, University of Texas-Pan American, 2005), p. 85

94) D.R. SarDesai, 앞의 책, p. 239.

95) Josef Silverstein, 앞의 책, p. 38.

96) 윤홍근, "버마의 민주화경험: 배경, 과정 및 전망," 한석태 외, 앞의 책, p.

1972년에 BSPP의 중앙위원회는 사회주의 국가인 버마의 산업화에 대한 20년계획을 승인하였다. 이 20년계획은 4년을 주기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였는데, 제3차 경제개발계획은 특히 성공적이었다. 1982년 3월에 농업부문에 서의 연평균 성장률 6.6%를 크게 충족시킨 것이다.

### ① 경제개발계획추진

기본적으로 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우선 과제로는 개발계획을 들 수 있다. 특히, 국가가 주도하여 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목표와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네윈의 군부정권은 뚜렷한 계획없이 버마식사회주의를 토대로 경제개발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버마에서 실질적인 경제계획은 70년대 초반에 이루어졌다. 즉 장기20년계획(1971/72~1990/91)이 1971년에 만들어져 제1차 경제개발4개년계획(1971/72~1974/75)이 시행되었지만 1차계획은 연평균 경제성장률 1.1% 달성에 그쳐 큰 효과를 내지 못하였다. 1974년 버마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성립으로 장기20개년계획이 다시 수정되어 공업화된 사회주의 국가를 목표로 하는 신장기20개년계획이 (1974/75~1993/94)가 세워지고 1974년부터 제2차 경제개발4개년계획 추진되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연4.8%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다. 1978년 4월에서 1982년 2월까지의 제3차 경제개발4개년계획은 총달성량에서 가장 성과가 컸다. GNP 증가율은 목표 6.6%이었으나 실적은 6.7%에 이르렀다.

<표-6> 버마의 경제계획

시기	경제계획
1955/56 ~ 1959/60 1960/61 ~ 1964/65	제1차 4개년계획과 (1956년 7월 공인) 제2차4개년계획 (이행불가)
1963/64 ~ 1970/71 1964/65 ~ 1971/72	군부정권 하의 4개년계획 (비공식발표) 군부정권 하의 7개년계획 (비공식발표)
1970/71 ~ 1973/74 1974/75 ~ 1977/78 1978/79 ~ 1981/82 1982/83 ~ 1985/86 1986/87 ~ 1989/90	제1차 4개년계획 제2차 4개년계획 제3차 4개년계획 제4차 4개년계획 제5차 4개년계획

출처 : David I. Steinberg, *Burma's Road Toward Development, Growth and Ideology Under Military Rule*,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1987. Khin Maung Nyunt, *Market Research of Principal Exports an Imports of Burm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ailand (1970/71 to 1985/86)*, (Bangkok: Institute of Asian Studies Chulalongkorn University, 1988, p. 18.

## ② 수정경제정책

버마 경제의 대표적인 산물인 쌀생산량을 보면 1962~72년간의 외형적으로는 670만 톤에서 800만 톤으로 증가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의 인구증가율 2%를 감안하면 오히려 쌀 생산율이 감소한 것이다. 그 결과 혁명평의회 시대의 네윈정권은 우누정권 시대에 달성했던 4~5%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1.4%의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마이너스 성장이 3번(1963/4, 1965/6, 1966/7)이나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60년대를 마감하게 된다. 1971년 버마사회주의계획당 제1차 당대회에서 비효율과 무기력 그리고 정책주안점의 혼선이 버마경제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하였고, 버마사회주의계획당의 장단기 경제정책(Long-Term and Short-Term Economic Policies of the Burma Socialist Programme Party)라는 보다 실용주의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을 모색해 나갔다.

장단기 경제정책은 소련식의 급속한 중공업화보다는 농업과 소비재산업, 광업을 중시하고 이데올로기적 동원보다는 물질적 유인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토대 위에서 버마의 비동맹외교노선을 손상시키지 않은 범위 내에서 버마 정치, 경제의 파멸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버마식사회주의 원칙에 대한 현실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수정선언을 통해 보다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농업부문에서는 “고수확 품종 장려프로그램”(High Yielding Variety Promotion Program: HYV)을 1970년대 중반부터 약 10여 년 간에 걸쳐 진행시켰다. 고수확종자와 거름, 화학비료, 농약의 사용을 적극 장려했고, 군인, 정당인, 공무원, 노동자 등을 포함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농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새로운 농업기술과 노동자들의 지원 덕분에, 1975~1985년 동안 쌀생산량이 호조를 보였다.<sup>97)</sup>

<표-7> HYV의 수확량과 화학비료투입량

연도	수확량 (톤/헥타르)	연도	화학비료투입량(톤)
1961	1.6	1962~63	14687
1969	1.7	1971~72	47197
1973	1.8	1972~73	67989
1974	1.8	1973~74	12424
1975	1.8	1974~75	74000
1976	1.9	1977~78	106,000
1977	2.0	1978~79	162,000
1978	2.1	1981~82	227,000
1979	2.4	1985~86	325,000
1980	2.8	1986~87	304,000
1981	2.9	1987~88	203,000
1982	3.2	1988~89	153,565
1983	3.1	1989~90	131,888
1984	3.1	1990~91	109,098
1985	3.1	1991~92	99,098

출처 : U Kyi Win, *A Century of Rice Improvement in Burma*, p.61; U Kyaw Myint, *Study on the Changes of Rice Production in Myanmar*, p. 28, 32, 44. Maung Thawngmung, 앞의 책, p. 223. 재인용.

산업부문에서도 네윈의 수정선언에 발맞추어 BSPP는 1977년 2월 제3차 당대회를 열어 인민복지의 이름으로 해외자본의 적극적인 유치와 국내 사적 기업의 활동을 승인하는 신경제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경제자유화의 조치는 국영기업의 경영자유화를 위해 상업주의를 도입하고 기업단위의 독립

97) Maung Thawngmung, 앞의 책, p. 86.

채산제 실시, 정부보조금의 폐지, 경쟁생산제의 실시, 노동자에 대한 상여금 제도의 도입, 유통기구의 개선을 위해 일부 상품에 대한 거래통제의 철폐, 자유가격제 확대실시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sup>98)</sup>

1976년의 부분적인 경제자유화 조치의 결과 버마의 외국원조와 차관의 도입을 통해 공공부문과 농업생산의 투자를 늘려갈 수 있었고, 종자개량과 비료생산의 확대를 통해 농업생산량을 배가시킬 수 있었는가 하면 석유생산과 천연가스의 생산증대 등의 요인에 힘입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가져왔다. 쌀생산과 석유생산의 증대에 힘입어 1977/8~1982/83년간 버마의 국내총생산은 연평균 6%이상으로 증대하여 나갔고, 4차 4개년 계획 기간인 1982/3~1985/6년간 국내총생산은 167억 1,700만 짜트에서 206억 7,460만 짜트로 연평균 5.5%의 성장을 보였다.

---

98)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연구원, 앞의 책, p. 113.

<표-8> 버마의 1962/63~1986/87년 동안의 공공투자율 (단위 :%)

구역	1962/63	1985/86	1986/87
농업	13.0	12.0	9.2
축산업과 수산업	2.0	5.0	3.8
광산업	4.9	28.9	24.1
제조업과 기계	4.2	10.3	8.8
건설업	15.8	6.0	9.2
통신업	23.5	12.7	17.7
무역업	4.9	2.8	2.5
서비스업	4.5	9.2	8.0
정부·기관	26.0	6.2	8.0
기타	1.0	1.1	2.2

출처 : Maung Thawngmung, 앞의 책, p. 85.

<표-9> 버마의 수출구조 (단위: %)

연도	농산물	축산과 수산물	목제품	광물과 보석	기타	재수출품	총수출
1970~71	65.9	0.1	23.7	8.9	0.3	1.1	100.0
1971~72	64.1	0.2	22.5	9.6	0.7	2.9	100.0
1972~73	48.2	0.6	30.3	17.9	1.5	1.5	100.0
1973~74	58.1	0.4	27.4	9.3	3.3	1.5	100.0
1974~75	57.5	0.3	25.4	11.3	3.9	1.6	100.0
1975~76	59.3	0.3	21.7	7.6	1.2	9.9	100.0
1976~77	51.6	1.1	22.4	6.2	1.1	17.6	100.0
1977~78	60.9	2.1	22.7	11.1	1.5	1.7	100.0
1978~79	29.2	3.1	49.0	15.6	2.5	0.6	100.0
1979~80	56.9	3.0	20.7	17.1	1.7	0.6	100.0
1980~81	54.6	2.9	24.7	14.5	1.8	1.5	100.0
1981~82	56.5	3.6	22.5	13.7	3.1	0.6	100.0
1982~83	51.6	5.0	26.8	13.1	2.4	1.1	100.0
1983~84	52.0	2.7	26.9	14.7	2.3	1.4	100.0
1984~85	43.5	4.3	33.4	14.8	2.1	1.9	100.0

출처 : *Khin Maung Nyunt*, 앞의 책, p. 22.

그러나 HYV 프로그램은 1980년대 중반에 들면서 개발한계에 도달했다. 이는 HYV 적용 지역에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이 제한되고 인력과 비료의 투입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군부는 HYV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며 농업생산의 증진에 따라 필요한 관계망과 산업기반시설들을 제공할 수 없었다.<sup>99)</sup> 또한 1983년 이후에는 석유생산의 저하로 인해 운송비의 폭등과 쌀, 식용유 등 생필품 가격상승을 초래하면서 다시 경제성장이 저성장으로 나아가기 시작한다.

99) *Maung Thawngmung*, 앞의 책, p. 86.

<표-10> 대외무역의 평가 (단위 : 백만 짜트)

	1982-83	1987-88
수출	3003.3 (농산물: 1560)	1655.2 (농산물: 452)
수입	6313.6(기계류와 수송수단: 2931.14)	4065.7(기계류와 수송수단: 1937.92)
무역수지	(-)3310.3	(-)2410.5

출처 : The Government of The Union of Myanmar, *STATISTICAL ABSTRACT 1996*, (Yagon: Central Statistical Organization, 1996), p. 109~110.

무엇보다도 버마의 주요 수출품이었던 곡물, 티크, 광물 등의 국제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해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버마의 외채는 1973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하여 1976년에는 3억 800만 달러이었던 것이 1982년에는 20억 달러, 1987년에는 43억 4,800만 달러로 대폭 증가해 나감으로써 수출액의 45%를 외채상환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다.<sup>100)</sup> 이러한 외환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내세운 수입제한 조치는 원자재와 자본재의 수입 감소로 인한 공장가동률 저하와 공업생산고의 감소를 초래하는 악순환에 처하게 된다. 물자부족은 공식무역액의 1/3이 넘는 밀무역과 암시장의 확산을 낳을 뿐만 아니라 1985년 이후 연 20%의 물가폭등을 야기하게 된다. 버마의 외채는 버마식사회주의의 수정을 통해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1971년에 21.7백만 달러에서 1975년에는 100백만 달러, 1978년에는 459.7백만 달러로 증가 하더니, 1985년에는 2,947백만 달러로 급증하게

10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얀마 편람』 (서울: 오름시스템, 1994), p. 186.

되었다. 버마경제규모에서도 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져, 1970년에 GNP의 5%이었던 외채는 1985년 GNP 42.1%를 차지했다.<sup>101)</sup> 결국, 외채는 87년 3,600백만 달러, 채무변재율은 86년 50%를 넘고 87년에는 60%에 달하는 가운데 1988년 3월의 경우 쌀의 암시장가격이 정부의 쌀배급 가격보다 700%나 넘게 치솟아 경제파탄을 맞게 된다.

## 2. 국가성격 : 국가자율성, 국가능력, 리더십

네윈의 군부정권은 쿠데타 직후, 버마의 치안회복과 경제발달, 정치적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이 국가의 통제력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군부엘리트들은 정치, 행정기구, 국영기업체, 민간기업, 각종 결사단체 등에 진출하였다. 특히 중요한 것은 군부엘리트가 정치행정엘리트로서 전략적 국가부문을 모두 장악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정치적인 면에서, 네윈의 혁명평의회는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권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했고, 군부가 주축이 되는 치안행정위원회를 결성하여 중앙조직은 물론 지방조직까지 관리하였다. 또한 집권당인 BSPP를 결성하여 모든 정당을 해산하며, BSPP의 일당독재를 추진하였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네윈은 버마식 사회주의를 통해 국가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토지개혁과 국유화 대외자립경제를 통해 국가 중심의 경제발전을 추구한 것이다. 소작법과 공출제도는 국가기구인 UBAMB이 독점하였고 국유화에 의해 모든 기업은 SECC의 통제 하에 들어갔으며, 국내·외 은행도 정부가 인민은행을 통해 경제전반을 통제하였다. 대외무역조차도 MEIC의 통제 하에 두었다. 네윈은 정치적·경

---

101) Josef Silverstein, 앞의 책, p. 38.

제적인 면에서 강력한 국가자율성을 지닐 수 있었다.

그러나 버마식 사회주의는 실패하였고 1974년 신헌법에 의해 수정되었으며,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결국 1988년 민주화항쟁을 맞았다. 강력한 국가자율성은 받침이 되었지만, 버마식 사회주의 정책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도, 조직도, 인력도 버마엔 존재하지 않았다. 특히 버마경제정책은 주로 비전문적인 네윈과 군인 중심의 BSPP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체계적인 경제개발계획을 세우지도 못하였다.

또한 네윈은 집권할 동안 별다른 리더십을 보이지 못했으며 옛날의 버마 왕들과 같이 점성술과 불교에 의지해 정책을 추진하였다. 실제로 점성술과 불교에 대한 네윈의 집착은 유명하다. 그는 주요 정치 일정, 화폐 개혁 등 국가의 주요한 일을 정할 때는 꼭 점성술사의 의견을 들었다고 한다. 실례로 버마가 영 연방에서 독립하여 공화국으로서 새출발을 선언한 것은 1948년 1월 4일 새벽 4시 20분였다. 점성술사가 선택한 날짜와 시각에 독립을 선포한 것이다. 1987년 9월 22일 네윈의 단독결정으로 단행한 화폐개혁에서 등장한 화폐는 특이하게 90짜트와 45짜트였다.( $9+0=9$ ,  $4+5=9$ ) 이는 정상적인 화폐계산보다는 네윈 자신이 '9'에 대한 믿음이 강하였고, 이 역시 점성술사의 조언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후에 SLORC이 국민의 여세에 밀려 진행한 총선날짜가 5월 27일( $2+7=9$ )인 것도 9와 상당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sup>102)</sup>

네윈의 이러한 소극적이고 미신적 성향은 '방관형 리더십'에 의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지도자로서 결단력과 추진력도 없었고, 경제성장을 위한 적

---

102) 네윈의 이러한 점성술과 불교에 대한 집착은 다음을 참고한다. 장준영, “버마 정치에 있어서 종교와 상징: 1988년 민주화 요구 시위사례를 중심으로,” (정치학석사논문, 서강대학교대학원, 2002); Robert H. Taylor, 앞의 책; 신봉길, 앞의책; Maung Maung, 앞의 책.

극적인 노력도, 정치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1974년 군정 종식과 때를 맞추어 그 동안 누적된 사회 각계각층의 불만이 시위와 반정부 운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자 네윈은 1981년 건강상의 이유로 우 산유(U San Yu)에게 대통령직을 이양하고 자신은 BSPP당 의장직에 머물렀다. 형식적으론 민주적 정권이양이었지만 실제적으론 경제파탄의 책임회피를 노린 것이다. 그러나 모든 실질적인 권한과 이권은 계속하여 네윈이 장악하고 있었다.<sup>103)</sup>

### 3. 네윈정권의 경제체제와 국가성격의 평가

지금까지 1962년부터 1988년까지 네윈정권의 경제체제와 국가성격에 대해 살펴보았다. 네윈은 1962년 쿠데타 당시, 독립 이후 버마국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민족주의적인 저항과 부자들에게 대한 저항에 힘입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선택하였다. 이는 버마의 오랜 외세의 침략에, 특히 영국에 대한 반감이 깊게 작용한 것이며, 중국의 국경을 마주하고 있던 버마가 당시 중국이 선택한 사회주의경제체제에 호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네윈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선택에만 그치지 않고, 네윈만의 ‘버마식 사회주의’체제를 수립하였다. 농업이 잘 발달되어 있던 버마의 실정에 맞추어 스탈린식 사회주의 경제모델과는 달리, 집단농장을 형성하지 않고 농업의 착취를 통한 급속한 산업화에 기반을 두고 있는 네윈만의 사회주의적 경제모델을 확립한 것이었다.

---

103) D.R. SarDesai, 앞의 책, p. 239.

초기 네윈의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의 기본원리가 그러하듯, 다수의 복지를 위하여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공유의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얻어진 이익을 전원이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네윈은 이 원리를 기본으로 식민지 유산을 타파하고 버마인 스스로 경제실현을 장악하여 민족주의적인 경제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들을 취해갔다. 농업정책, 국유화, 대외자립정책의 제도화는 그 나름대로의 설득력과 효용성을 갖고 있어 그 성공가능성에 많은 기대를 갖게 하기 충분했다. 농업정책은, 비록 국유화되지 않았지만, 소작법과 공출제도 등으로 국가의 강력한 통제를 받았으며, 국가의 모든 사업은 국가 소유로 들어오게 되었으며, 농업이익에 의한 내수수입원의 확보로 자립외교노선을 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네윈의 버마식 사회주의는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체계’(The System of Correlation of Man and His Environment)라는 다소 추상적인 철학적인 개념을 도입하고 정통적인 불교복지국가(A Buddhist Welfare State)라는 개념으로 사회적 요구의 이상과 동일시하여 기본적으로 국가의 기능을 버마 민중들로 하여금 궁극적 구원의 기회를 가능케 해줄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을 확립하는데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버마식 사회주의는 버마의 전근대성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과학성도 갖추지 못한 무정형한 이념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러한 이념의 경직성과 모호함으로 사회주의의 추구라는 추상적 과제와 복지의 확대라는 구체적 목표를 실행한다는 현실 사이의 격차를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다.

국유화에 의해 기업들은 군인들의 소유가 되었지만, 전문 지식의 부족으로 경영상태는 악화되었고, 농업정책의 실패로 암시장이 형성하게 되고, 공출제도에 농민들의 불만이 쌓여 전반적인 쌀생산량에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농업이익에 의해 내수수입원을 확보해 자립외교정책을 추진하려던

초기의 정부생각도 수정이 불가피했다. 결국 1974년에 네윈은 자신의 버마식 사회주의의 모순을 인식하고 버마식 사회주의를 수정하게 된다. 경제위기  
대한 국민들의 반발은 물론 군부 내부로부터의 상당한 도전에 직면했기 때  
문이다.

비록 형식적이지만, 1971년 군정에서 민주적 집권제도로 전환하는 신헌법  
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진 정치체제의 변화에 맞추어, 네윈은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경제개혁을 시도하였다. 1974년 신헌법 20조에서는 ‘사회주의 경제체  
제에 위해가 되지 않는 사기업의 존재와 활동을 법률에 의거해서 허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버마식 사회주의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 조항은  
1977년 법률12조 ‘사기업의 권리보장(Rights of Private Enterprise)’으로 명  
문화되었다. 또한 군정시기에는 경제개발계획이 공식화되지 않았지만, 1971년  
버마사회주의계획당 제1차 당대회에서 비효율과 무기력 그리고 정책주안점  
의 혼선이 버마경제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하였고, 버마사회주의계  
획당의 장단기 경제정책을 추진해 실질적인 경제개발을 이루고자 하였다.  
1990년도까지 총 5회에 걸쳐 추진되는 4개년개발계획은 꽤 성공적이었다.

세부적으로 농업부문에서는 HYV프로그램을 통해 농업생산의 증가를 꾀  
하였으며, 산업부문에서도 네윈의 수정선언에 발맞추어 BSPP는 1977년 2월  
제3차 당대회를 열어 인민복지의 이름으로 해외자본의 적극적인 유치와 국  
내 사적기업의 활동을 승인하는 신경제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부분적인 경제자유화 조치의 결과 버마의 외국원조와 차관의 도  
입을 통해 공공부문과 농업생산의 투자를 늘여갈 수 있었고, 종자개량과 비  
료생산의 확대를 통해 농업생산량을 배가시킬 수 있었는가 하면 석유생산과  
천연가스의 생산증대 등의 요인에 힘입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에 들어 버마의 경제는 다시 한번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버마 국가재정의 부족으로 HYV프로그램은 1980년대 중반에 들면서 더 이상 추진이 어려웠으며, 또한 1983년 이후에는 석유생산의 저하로 인해 운송비의 폭등과 쌀, 식용유 등 생필품 가격상승을 초래하면서 물자부족현상이 나타났으며, 1980년대 이후 급증한 외채의 증가로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경제위기는 버마국민들의 대규모 민중 봉기로 귀결되었다.

네윈은 버마에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선택했다. 그러나 버마식 사회주의는 버마의 전근대성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과학성도 갖추지 못한 무정형한 이념에 불과했다. 이러한 이념의 경직성과 모호함으로 사회주의의 추구라는 추상적 과제와 복지의 확대라는 구체적 목표를 실행한다는 현실 사이의 격차는 너무나 컸다. 또한 네윈정부는 피터 에반스가 지적했듯이 사회로부터 거대한 양의 투자 잉여를 추출하지만 그것을 경제혁신에 필요한 집합재로 공급할 수 없었고, 발전목표를 추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자율성, 능력에 한계를 나타냈다. 더욱이 네윈, 자신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저력을 보이지 못했다. 모든 산업의 국유화나 공출제도를 통한 농업이익의 확보 등 국가가 거대한 양의 잉여를 획득할 수 있었으나, 군부에 의한 중앙권력의 독점으로 인한 그들의 무능과 비효율로 인해 버마의 경제를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버마식 사회주의의 수정을 추구하기 이전에는 그렇다할 경제의 가장 기본인 경제개발계획도 없었으며, 모든 경제정책은 버마식 사회주의의 기조에 따라 체계적이지 못하였고, 비과학적이었으며, 무정형한 정책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본다면 네윈정권은 중앙지도기관으로서 산업의 혁신을 추진할 의사도 능력도 없는 약탈국가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 IV. 박정희정권의 경제체제와 국가성격

박정희정권은 정치적으로 크게 1962~1972년과 1972~1979년인 유신시기로 나눌 수 있다.<sup>104)</sup> 그러나 경제적인 면에서는 큰 변동없이 지속적인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 집권 18년(1962~1979) 동안 한국경제의 성장을 추진하였다. 국민총생산은 무려 27배가 증가했고 경제성장률도 평균 8%였다.

처음부터 박정희는 민생고 해결과 경제재건에 쿠데타의 명분을 두었다. ‘혁명공약’ 제4항에서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고 천명했다.<sup>105)</sup> 1963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 출판된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 박정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우리의 지상 목표는 두말할 것 없이 4.19혁명을 계승하고 경제·정치·사회·일반문화의 향상과 신민족세력을 배양하는 데 있었다.<sup>106)</sup>

---

104) 1972년에서 1979년 10월 26일에 이르는 이 시기는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박정희 정권이 어려운 시기였다. 7·4남북공동성명, 10월유신, 유필용 사건, 김대중 납치사건, 영부인 육영수 여사 암살, 월남폐망, 코리아게이트, 8·18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카터의 철군정책, 긴급조치9호까지 발동, YH여공 신민당사 농성사건, 김영삼 의원제명, 부마사태 등이 주요한 사건으로 발생하였다.

105) 쿠데타 이전의 경제주요지표들은 다음과 같았다. 경제성장률은 1958년의 5.5%, 1959년의 3.8%, 1960년의 1.1%로 계속 하락하고 있었으며, 1960년경에는 완전실업자가 250만, 농촌의 잠재실업자 200만, 총노동인구의 45%에 해당하는 정도이며, 이 당시 1인당 실질 국민소득은 불과 80달러 정도였다. 백영철 편, 『제2공화국과 한국민주주의』(서울: 나남, 1996), p. 322.

106) 박정희, 앞의 책, p. 10.

박정희는 정치·경제·사회라는 관용적 표기순서 대신에 경제를 앞에 내세웠다, 그는 이 책에서는 물론이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주정치’를 강조했지만 적어도 민주정치의 구현이나 정착을 쿠데타의 명분과 군정의 실적으로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6개항의 혁명공약 그 어디에도 ‘민주주의’ 또는 ‘민주정치’라는 표현이 없는 것으로도 입증이 된다. 박정희는 이른바 ‘경제재건’에 그 자신과 쿠데타 정권의 운명을 걸었던 셈이다.

5·16군사혁명의 핵심은 민족의 산업혁명화에 있었다는 것을 재강조하고 싶다는 것이다. 물론, 이 5·16혁명의 본령이 민족국가의 중흥 창업에 있는 이상, 여기에는 정치혁명사회혁명문화혁명 등 각 분야에 대한 개혁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니나. 그 중에서도 본인은 경제혁명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이다.<sup>107)</sup>

박정희는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추진해 산업화와 사회의 근대화를 추구하면서 선진국 경제와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정부의 주요한 경제기능과 결과에 따라 그 목표를 변경되었다. 제1차 개발계획은 수입대체산업화에 의한 성장의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제2차 개발계획은 수출주도형 산업화에 의한 양적인 성장에 목표를, 제3차 개발계획은 중화학 공업발전에 의한 질적인 충실화에 두었으며, 제4차 개발계획은 중화학 공업발전의 연장과 함께 사회개발의 필요성과 사회구성원의 형평성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것이다.

이 장에서는 박정희의 경제정책을 수출주도형 경제정책과 중화학공업추진정책을 기준으로 1~2차 경제개발계획과 3~4차 경제개발계획을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

107) 박정희, 앞의 책, p. 37.

## 1. 경제체제와 경제정책

### 1) 1기(1961~1971년) : 수출주도형 산업화

#### ① 제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1962~1966년)

우리의 의욕에 찬 경제5개년 계획이 새해부터는 발족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계획에는 공업발전과 자원개발이라든지 이를 위한 자본 현성과 외자도입 문제,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계의 합리화, 국제수지의 균형 등의 성안이 짜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계획의 강력한 추진으로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업자가 점차 해소될 것이고, 장차 복지국가 건설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후진과 빈곤의 근원이라고 할 농촌의 부흥도 계획되고 있습니다. 농민의 생활 향상 없이는 경제발전도 민주발전도 바라 수 없기 때문에 농촌 정책에 계속하여 주력할 것입니다.<sup>108)</sup>

쿠데타 정권의 경제개발 제1차 5개년계획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와 더 유사했다.<sup>109)</sup> 기업의 자율은 억제되고 정부의 지도력은 강화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방식을 원용하는 이른바 혼합경제질서였다. 이러한 경제계획은 당시 후진국들의 시대적 과제

---

108) 박정희, 「1962년 신년사」. [www.516.co.kr](http://www.516.co.kr) (2005.9.14).

109) 1962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북한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북한은 전후 시작한 5개년계획을 공업생산 증가율 연평균 36.6%라는 경이적인 성과를 기록하며 종료하고, 7개년계획을 수행 중이었다. 위로부터의 강력한 지도에 의한 이 개발방식에 박정희는 주목했으며,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에서 박정희는 정권 발족 직후부터 사회주의 계획경제라고 오인할만한 제1차5개년계획을 수립시킨 것이다. 하신기, 앞의 책, p. 239.

였다.

제1차 5개년계획의 주요 경제정책은 수입대체산업화(Import-substitution Strategy of Industrialization: ISI)를 추진하기 위한 수입규제, 관세보호, 금융지원, 재정투융자 등의 다양한 정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1차 계획의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이 예상보다 빨리 달성됨에 따라 1966년 이후부터는 수출주도형 산업화(Export-led Strategy of Industrialization: ESI)를 위한 경제정책들이 시도되었다. 1963년부터 수출진흥과 외화획득으로 경제정책의 중점을 옮겨 울산공업단지를 시작으로 섬유 등의 노동집약적인 수출산업을 육성한 것이다.<sup>110)</sup>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이 대내 지향적이었다면, 수출주도형 산업화 전략은 대외 지향적이었기 때문에 수출촉진을 위한 정책으로 수출우대 금융, 원자재 수입관세 감면, 수출상품과 그 원자재에 대한 간접세 감면, 그리고 수출 소득에 대한 50%의 직접세 감면 및 공공요금할인 등으로 나타났다.<sup>111)</sup>

통화개혁에 의한 통화관리체제의 강화로 물건과 돈의 흐름도 좋아졌다. 이에 때맞춰 베트남 전쟁수요가 겹쳐 수출이 급성장했다.<sup>112)</sup> 또한 1965년

---

110) 이 때부터 박정희는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60년대는 경공업 중심, 70년대는 중화학공업 중심이다. 이러한 수출주도형 경제개발전략을 추진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분단으로 국내시장이 협소하여 산업화에서 규모의 경제를 살릴 수가 없었다. 60년대 초의 한국인구는 2,500만 명 정도였고 그나마 낮은 수준으로 국내의 수요가 극히 저조했다. 둘째, 60년대에는 국제시장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경공업분야의 해외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실업을 흡수하고 고용증가에 따른 소득 증가를 통해 국내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었으며, 70년대에는 대외 경쟁력의 제고를 통해서 경제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업화과정에 필요한 선진국의 자본재 도입과 부족한 국내재원에 충당할 외자가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이다. 정정길, 『대통령의 경제리더십: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경제정책관리』(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4), p. 285.

111) 민준기 외, 『한국의 정치』(서울: 나남, 1996), p. 165.

112) 한국군 해외수당을 통해 외화획득효과를 가져왔고, 군수물자보급, 토목, 수송 및 용역계약 등으로 1969년에 이르기까지 누계 5억불 상당의 특수를 가능케 했다. 김호진, 앞의

일본과의 국교정상화에 의한 원조는 경제효과라는 측면에서 더욱 성장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제1차 5개년계획 실시 후, 연 평균 15%의 공업성장률을 달성했고, 경제성장률은 목표치에 웃도는 8.5%였다. 수출액은 1964년의 1억 달러를 기점으로 연 40%대로 급성장했으며, 1인당 국민총생산(GNP)은 83달러에서 125달러로 증가되었다.

그러나 제1차 5개년계획의 문제점으로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초공업의 빈약, 투자재원체제의 미비, 식량자급의 실패, 소득의 편중적인 분배 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sup>113)</sup>

## ② 제2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1967~1971년)

제2차 5개년계획은 섬유, 합판, 신발류 등의 노동집약적 경공업품의 수출 촉진을 통한 대외지향적 공업화 정책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화학, 철도 및 기계공업의 촉진정책이 시도되었다. 수출의존도는 제1차 경제개발계획 때는 평균 8.0%에 불과했으나 이 기간에는 15%로서 2배에 가까워졌으며, 제1차 경제개발계획기간 동안에는 전력·비료·섬유·양회 등 기초산업과 내수산업이 성장을 주도했으나, 이 기간동안에는 합성섬유·화학섬유·전기기기 등 공산품이 수출산업에서 86.0%를 차지함으로써 산업구조의 전환기를 가져왔다.

또한 본격적으로 공업화가 추진되었으며, 수출의 급성장과 더불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9.7%로서 계획을 초과 달성하였다. 이와 같은 높은 경제성장률은 한국 경제를 도약의 발판 위에 올려놓았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세계 경제의 자유무역주의의 확대로 수출이 크게 신장되었으며, 한국도 관세 및

---

책, p. 563.

113) 강광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pp. 26~41.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가입하고 케네디라운드(Kennedy Round)에 참여 등 개방체제를 적극 이행한 시기였다. 그리고 수출은 연평균 38.0%나 증대되었고, 1971년 수출 11억 3000만 달러를 달성하여 10억 달러 고지를 돌파하였다. 실업률은 4%대였고 국민소득도 400달러에 이르렀다.

이러한 성장을 가능케 했던 것은 바로 외자였다. 박정희는 경제개발에 외자를 적극 도입하였다. 과거 50년대에는 미국의 경제원조가 26억 달러에 달해서 총수입액의 약 70%를 담당해 주었으며, 1965년에 와서 미국의 무상원조가 없어지고 정부의 재정차관, 민간의 차관도입, 외국인 투자형태로 외자가 도입되었다. 특히 1965년 한·일회담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청구권자금이 들어와 외자 총액이 급증하였다. 따라서 실질적인 외자는 1965년의 한일국교정상화 이후에 들어왔으며, 같은 해 1월 베트남 파병 결정에서 1973년 3월까지 8년간에 걸친 전쟁특수에 의해 한국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표-11> 한국의 1960~70년대의 외자도입 (단위: 백만 달러)

연도	외채잔액	차관도입
1962	166.3	31.2
1967	473.0	297.1
1972	3,549.0	829.8

출처 : 이형구, 『한국경제론-성숙기의 국민경제운영의 과제와 방향』  
(서울: 박영사 1998), p. 200. 정정민, 앞의 책, p. 349. 재인용.

특히, 이 기간에 실시된 정책 중 농업의 근대화를 위한 경제정리 등 농업생산력 증진과 1968년부터 농민소득을 위한 고미가정책, 1970년부터 시작

한 새마을 운동은 농촌근대화와 농어민 소득향상에 결정적인 구실을 하였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의한 원동력이 해외 의존적 이어서 투자수요의 격증과 투자재의 해외 의존율이 늘어나 국민경제의 수입의존도도 이 기간 동안 26.2%나 증가하여 수입액도 21억 8000만 달러에 이르렀다. 이러한 외채의 증가는 국제수지의 악화와 기업의 부실화를 가져왔고, 도시의 비대화에 의한 농촌의 상대적인 정체를 발생시켰다.<sup>114)</sup>

<표-12> 경제개발계획의 목표와 실적 비교 (단위: %)

	1차 계획 (1962~1966)		2차 계획(1967~1971)	
	계획	실적	계획	실적
GNP성장률	7.1	8.3	7.0	11.4
농림 수산업	5.7	5.5	5.0	2.0
광공업	15.1	14.8	10.7	20.9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5.4	8.9	6.6	13.2
산업구조(최종연도)				
농림수산업	34.8	37.9	34.0	24.2
광공업	20.6	19.8	26.8	29.9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44.5	42.3	39.2	45.9

출처 : 메이슨·김만재 외, 『한국경제, 사회의 근대화』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85), p. 271.

108) 강광하. 앞의 책, pp. 42~57.

## 2) 2기(1972~1979년) : 중화학공업화

### ① 제3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 (1972~1976년)

제3차 5개년계획의 기본 목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균형성장을 위한 성장·안정·균형에 조화를 두고, 그 기본 방향은 중화학공업의 육성과 자본재의 수입의존도를 지양하고 국민경제의 자립화기반을 더욱 다지면서 산업구조의 고도화, 국제수지의 개선, 주곡의 자급, 지역개발의 균형에 치중함으로써 전반적인 성장과 안정의 균형을 시도하였다. ‘수출 100억 달러, 국민소득 1000달러’라는 목표를 걸고, 진정한 신흥공업국가로 나아가고자 하였다.

<표-13> 산업구조의 변화 (단위: %)

구분 연도	중화학공업	경공업
1970	41.6	58.4
1971	42.8	57.2
1973	42.3	57.7
1974	52.3	47.7
1975	51	49
1976	52	48
1977	54.4	45.6
1978	56.1	43.9
1979	58.3	41.7
1980	57.5	42.5
1981	58.5	41.5
2004	82.2	17.8

출처 : 통계청 <통계자료: GM·GDP 등 주요지표>, 2005. www.nso.go.kr  
(2005.9.3)

박정희는 개인적으로 중화학공업 중요성을 강조, 추진하는 저력을 보였다. 박정희가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밀어 붙인 데는 주한미군 철수계획, 국방력 강화와 방위산업 육성의 필요성 등 당시의 냉전구조 속에서 도출된 정치안보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다.

또한, 1970년대 전반기부터 경공업제품에 대해 미국 등 선진국의 수입규제가 시작되었고 경공업제품의 수출시장을 둘러싸고 다른 후발국과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경공업제품의 지속적인 수출증대가 곤란해지게 되었다.<sup>115)</sup> 그러나 1971년 8월의 '닉슨 쇼크'에 의한 국제경제 질서의 혼란, 1973년 10월의 석유파동 등으로 어려운 고비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외자도입의 확대, 수출 드라이브 정책, 중동 건설경기 등의 수출촉진정책으로 난국을 극복하여 연평균 9.7%의 성장률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수출촉진과 더불어 중요한 특징은 철강·수송용 기계·전자공업·조선공업 등 중공업이 성장산업으로 등장하면서 중화학공업의 구성비율을 한층 높이고 자본재의 대외의존도를 경감시켰다는 점이다. 또한 국민저축률은 국민소득의 증가와 저축수단의 다양화 등 정책효과에 기인하여 1971년 19.6%에서 1976년에는 21.4%로 증가했고, '8·3조치'에 의한 자금융의 양성화와 기업금융의 개선도 크게 주목되었으며, 이와 병행하여 <기업공개촉진법>의 제정 및 5·29조치 등에 의하여 강력히 기업공개를 추진하고 직접금융을 확대하여 시장기능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 기간에 드러나 문제점도 제2차 5개년계획에서 나타났던 투자재원조달에서의 외채의 비중 증대, 공업구조의 취약성, 만성적인 국제수지적자와 인플레이션의 확대연

---

115) 이재희, "1970년대 후반기의 경제정책과 산업구조의 변화", 김명섭 외, 『1970년대 후반기의 정치사회변동』 (서울: 백산서당, 1999), pp. 96~103.

장이 되고 말았다.<sup>116)</sup>

## ②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77~1981년)

제4차 5개년계획은 제1·2·3차 개발계획과는 달리 사회개발의 필요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자 계획목표를 자력성장구조의 실현, 사회개발을 통한 형평의 증진, 기술혁신과 능률의 향상에 두고, 기본 방향은 3차에 걸친 계획의 전략을 이어받아 철강·석유·비료·양회·기계·전자·조선 등의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하 공업화전략, 사회간접자본의 지속적인 확충,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능률향상과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4차 5개년계획은 1977년 100억 달러 수출달성, 1인당 국민총생산(GNP) 944달러로 호조를 보이는 듯 했으나, 총소비 증가율이 1979년 3.1%에서 1980년 0.7%로 감소되었고, 실업률은 1979년의 3.8%에서 1980년 5.2%로 높아지는 등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1980년 국민총생산은 1975년 불변가격으로 13조 9213억원에 그쳐 1979년 14조 8568억 원에 비해 무려 5.7%감소를 나타냄으로써 1인당 국민총생산도 1979년 1597달러에서 1508달러로 89달러가 줄어들게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에 의한 국내정치적 불안정 및 사회적 혼란과 1979년 제2차 석유파동, 세계정세의 전반적인 불황으로 인한 수출수입의 둔화와 국제원자재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약재들의 요인이 복합된 결과였다.<sup>117)</sup>

---

116) 강광하, 앞의 책, pp. 58~72.

117) 강광하, 앞의 책, pp. 73~86.

## 2. 국가성격 : 국가자율성, 국가능력, 리더십

박정희의 국가자율성은 정치적인 면보다는 경제적인 면에서 훨씬 강화되었다. 경제기획원의 설립과 금융부문의 장악, 외자를 통한 자원의 권위적 배분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다. 박정희는 시중 은행마저 국유화하여 민간 산업 자본을 통제하고, 국민경제와 사채라는 이자부 금융자본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추었다. ‘역금리제’나 ‘8·3긴급 경제 조치’가 그와 같은 능력의 극단적인 사례였다.<sup>118)</sup> 또한 쿠데타 직후 군부엘리트들은 정치, 행정기구, 국영기업체, 민간기업업, 각종 결사단체 등에 진출하였다.

특히 중요한 것은 군부엘리트가 정치행정엘리트로서 전략적 국가부문을 장악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한 조사에 의하면 1963년부터 1975년까지 장관의 35%, 도지사의 32.1%가 군 출신 엘리트로 충원되었다. 또 군부엘리트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동시에 선진 기술관료들을 충원함으로써 이들과 함께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했다.<sup>119)</sup>

국가능력은 한국의 경제기획원(EPB)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경제기획원은 경제선도기구로서 핵심 산업부문을 선별하고, 민간자본이 어느 정도 위험부담이 있는 장기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한국의 경제기획원은 공식적으로 가장 강력한 위상과 권한을 가진 기구이다. 한국 발전국가에서 경제기획원 장관은 부총리를 겸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획원이 예산작성에 대해 전권을 행사하고, 경제정책의 검열·계획·조정에 관한 기능을 총괄함으로써, 다른 부처들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주도하는 능력을 감소되었다. 국회의 사정권 밖에 존재하면서 기획

118) 김병국, 『분단과 혁명의 동학-한국과 멕시코의 정치경제』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4), pp. 38~39.

119) 한배호, 『한국정치변동론』 (서울: 법문사, 1994), p. 171.

원은 경제정책 결정을 거의 독점하였다. 한국의 경제성장에서 발전국가가 중심이었다면 발전국가에서는 경제기획원이 중심이었다.<sup>120)</sup>

경제기획원이 경제발전과 산업정책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산권과 외자도입권을 동시에 장악함으로써 사회부문에 대한 통제력과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었으며, 경제기획원 관료들이 대부분 일류대학과 행정고시 출신임에 따라 이들의 높은 동질성에 힘입어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적인 집행이 보장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정당과 다른 부처의 압력으로부터 경제기획원의 독자성을 보장하고 이들의 전문영역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주었다는 점이다.

특히 외자도입권은 피터 에반스가 지적했듯이 외국차관은 양쪽에 날이 선 칼을 갖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즉 외국차관이 궁극적으로 특정국가에게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것은 국가의 역할을 크게 팽창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박정희는 이 외자를 적극 도입했다. 결과적으로 1965~1974년 기간을 통해서 연간 평균 직접외국투자(DFI)액은 한국의 전체투자액의 2%를 넘어서지 않았다. 그러나 1965~1975년 기간 동안에 전체투자액의 15.6%가 순전히 외자에 의해 충원되었다. 이처럼 외자도입에 의존한 공업화과정을 추진하면서도 박정희의 군부권위주의 정권은 민간기업에 대한 통제를 계속 확보할 수 있었다.<sup>121)</sup> 외자는 특정국가의 자율성을 높이고 산업화과정에서 주도적이고 통제력을 발휘하기 하는 효과도 아울러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의 제도적 자율성과 우위성은 최고통수권자에 의해 주도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1960년대 후반에는 청와대 비서실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 직할체제가 구축되어 관료기구보다는 대통령 개입에게 경제정책

---

120) 윤상우, 앞의 논문, p. 168.

121) 한배호, 앞의 책, p. 182.

의 결정권이 집중되었고, 그 결과 경제기획원의 자율성과 정책주도능력을 점차 약화되었다.

박정희의 리더십은 특히 1973년 ‘중화학공업화’로의 정책전환인데, 이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결단에 의한 것이었고, 그 관장기구도 경제기획원이 아니라 청와대 경제수석을 단장으로 한 ‘중화학공업 추진위원회 기획단’이었다.<sup>122)</sup> 경제성장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해 짐에 따라 중화학공업에 반대했던 경제기획원보다는 자신의 뜻을 세우기 쉬운 청와대비서실이 두각을 나타내게 된 것이다. 중화학공업화 과정에서 경제기획원의 역할은 주변적인 재원조달, 사후관리에 집중되었고, 본래의 계획·집행·조정기능은 현저히 축소되었다. <sup>123)</sup>

또한 제3공화국 시기에는 경제성장과 안보를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과업 지향적인 국가관료제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관료체제를 통해서 자원동원 및 배분에 깊숙이 관여함은 물론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회세력의 점증하는 도전에 대해서 국가가 지닌 막강한 사회통제력을 행사하여 민중부문을 억압함으로써 급속한 자본축적을 가능케 하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제4공화국 시기에는 본격적인 중화학공업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강력한 개입과 자본과의 전략적인 제휴를 맺게 되었다. 또한 제1차 석유위기로 인해 국가의 강력한 조정능력이 필요로 하였고, 이 시기 이후로는 국가가 전략적인 우위에 설 수 있었다.<sup>124)</sup>

---

122) 원래 경제기획원은 중화학공업의 본격적 추진에 반대입장을 보였다. 그 당시 경제기획원의 기본논리는 중화학공업 육성에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고 그 회임기간도 길어 경제적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1970년대 초의 경제불황으로 정책추진의 여건도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경제기획원은 중화학공업의 재원을 당시의 전략산업이었던 경공업의 경쟁력 강화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럼에도 박정희가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밀어붙인 데는, 주한미군 철수계획, 국방력 강화와 방위산업 육성의 필요성 등 당시의 냉전구조 속에서 도출된 정치안보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윤상우, 앞의 논문, p.170.

123) 윤상우, 앞의 논문, p.170.

124) 최병선, “정치경제체제의 전환과 국가능력,” 김석준 외, 『국가와 공공정책』 (서울: 법문

1960년대 이후 한국의 발전국가 시기는 군사쿠데타에 의해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권의 강력한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하에서, 기획·집행·조정능력을 제도적으로 확보한 경제기획원의 역할과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결정체제 등에 의해서 국가의 자율성의 확보와 함께 강력한 정책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sup>125)</sup>

국가자율성과 국가능력을 확보한 박정희정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박정희의 ‘전략적 리더십’이었다.

4·19 이후 박정희는 정치사회적 무질서를 리더십의 부족과 경제적 후진성으로 인식했다. 따라서 정책집행상의 특징분석, 방법과 스타일에서 박정희는 목표지향적 정책선택과 강력한 추진을 보였다. 조국근대화를 주목표로 공업화를 통한 고도경제성장의 달성을 정하고 이 목표에 따라 모든 종류의 정책들을 선택하고 집행하였다. 공업우선, 성장위주의 개발정책을 추구하였으며, 대담한 외자도입과 수출주도형정책을 폈다. 또한 한일협정체결, 월남파병,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 건설 등 박정희는 일단 결정하면 주위의 반발에도 강력하게 이를 추진하였다.<sup>126)</sup> 또한 박정희는 결정 내려진 정책에 대해서는 스스로 공공 및 민간사업부문의 진도와 상황을 모두 항상 직접 점검하였다. 특히,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은 박정희의 현장지도 및 행정조직의 체계적 운용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군부쿠데타 정권의 가장 큰 오점인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박정희는 능력과 능률본위의 인사정책을 추진하였다. 혁명주체세력들이 고위직을 독점하기는 했으나, 경제부문, 특히 경제기획원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행정가들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

사, 1993), pp. 246~276.

125) 김선명, “한국 발전국가시기(1960-1979) 산업화의 정치경제: 국가·자본·노동계를 중심으로”, 「연세사회과학연구」, 제6집 (2000), p. 70.

126) 정윤재, “제3,4공화국의 성격과 리더십”, 「동북아연구」 제1집 1호 (1994), pp. 257~264.

<표-14> 경제기획원의 행정고시 출신 관료의 학력과 경력(1979년 7월)

(단위: 명)

출신대학		출신고등학교		경제기획원에서 근무부서	
서울대학교	26				
경제학·경영학	12	경기고등학교	6	기획부서	12
법학	6	경북고등학교	3	예산부서	7
기타	8	중앙고등학교	2	외자분야	4
고려대학교	1	기 타	7	물가정책분야	4
연세대학교	1	자료수입불가능	11	조사분야	2
기타	1				
합계	29		29		29

출처 : 김병국, 『분단과 혁명의 동학』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4), p. 109.

그러나, 이와 같은 박정희의 전략적 리더십에 의한 강력한 경제정책추진은 경제성장에는 유리했지만, 야당과 정치적 비판자들에 의해 “강권정치” “독재정치” 등으로 비판받게 되었다. 집권기간 내내 야당은 물론 각 분야의 비판적 지식들과 사회집단들의 결렬한 정치적 반대와 반독재투쟁으로 계속 도전받았다. 박정희는 이에 대해 철저한 물리적 탄압과 강경책으로 대처하였다.<sup>127)</sup> 국민적 비판과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지 못한 것이다.<sup>128)</sup>

127) 박정희시대의 민주화운동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와 탄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한다. 정영국, “유신체제 성립 전후의 국내정치”, 배금찬 외, 『1970년대 전반기의 정치사회변동』 (서울: 백산서당, 1999), pp. 205~236; 신광영, “1970년대 전반기 한국의 민주화운동”, 배금찬 외, 앞의 책, pp. 243~278; 마인섭, “1970년대 후반기의 민주화운동과 유신체제의 붕괴”, 김명섭 외, 앞의 책, pp. 259~302.

128) 정윤재, 앞의 논문, pp. 265~267.

### 3. 박정희정권의 경제체제와 국가성격의 평가

지금까지 1961년부터 1979년까지의 박정희정권의 경제체제와 국가성격에 대해 살펴보았다. 박정희의 1961년 쿠데타 당시, 한국은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으로 인해 미국에 영향을 받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미국의 정치·경제체제가 유입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생고 해결과 경제재건에 명분을 두고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에게는 선진국의 경제체제모델이 대안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버마와는 달리 경제적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기술과 자본이 부족했던 한국은 노동집약적인 수출산업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고 대외경제활동에 중심을 두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해 박정희는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박정희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통해, 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하였다. 박정희집권 18년 동안 (1962~1979) 동안 국민총생산을 무려 27배가 증가하였고 경제성장률도 평균 8%로 높은 증가를 보였다. 박정희의 뜻대로 한국은 신흥개발도상국으로 주목받는 국가가 되었다. 1차에서 4차까지의 박정희에 의해 추진된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성공적이었다.

한국은 수출주도형 산업화와 중화학 공업화를 통해 경제는 1963년과 1977년 사이에 매년 9%대의 성장률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290만이라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국민총생산(GNP)은 80달러에서 1981년엔 714억 달러, 45.2%를 차지했던 농업부문의 생산율은 그 동안 17%로 감소한 반면, 제조업부문의 비율은 17.1%에서 25.1%로 늘어났다. 수출액은 1962년 55백만 달러에서 1981년엔 21,254백만 달러로 증가했다.<sup>129)</sup>

---

129) 통계청 <통계자료: GMI·GDP 등 주요지표>, 2005. www.nso.go.kr (2005.9.3).

<표-15> 우리나라 경제개발계획 및 실적 추이 (단위: %)

구분	단위	1차 계획		2차 계획		3차 계획		4차 계획	
		62-66		67-71		72-76		77-81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경제상승률	연평균%	7.1	7.8	7.0	9.6	8.6	9.2	9.2	5.8

출처: 경제기획원, 「제1~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1980.

<표-16> 산업구조의 변화(1962~1987)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단위	1차 계획			2차 계획		3차 계획		4차 계획	
		1962	1966	1962~ 66평균	1971	1967~ 71평균	1976	1972~ 76평균	1981	1977~ 81평균
		농림수산업	%	33.4	31.7	-	28.8	-	24.0	-
광공업	%	21.7	25.7	-	20.9	-	29.5	-	31.3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	44.9	42.6	-	50.3	-	46.5	-	49.1	-
투자율	%	12.4	18.2	15.1	28.1	26.4	27.4	24.9	33.2	35.5
국내저축율	%	0.8	10.5	6.1	13.2	13.1	23.1	19.5	22.8	23.9
해외저축율	%	11.2	7.2	8.8	15.4	12.9	6.3	5.4	9.6	11.2
수출	백만	55	250	43.9	1068	33.8	7715	50.9	21254	22.5
수입	달러	422	716	21.5	2394	28.0	8774	32.4	26131	24.9

출처: 경제기획원, 「개발년대의 경제정책」, 1982.

<표- 17> 수출확대와 구조변화(단위: 백만 달러, %)

	1962	1967	1972	1977	1982
총수출액(백만 달러)	55	320	1684	10047	21853
수출상품구성비					
1차상품	63.0	27.5	12.1	13.8	7.9
공산품	27.0	72.5	87.9	86.2	92.1
중화학	10.4	12.5	25.3	39.4	52.8
경공업	89.4	87.5	74.5	60.6	47.2
대 GNP 비중(%)	2.4	7.4	15.0	27.2	30.7
세계시장점유율(%)	0.04	0.16	0.42	0.94	1.27

출처: 강광하, 앞의 책, p. 66

이와 같은 경제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박정희 정권이 국가 주도형 경제정책을 수행했기 때문이었다. 경제기획원을 두어 전문적인 지식인들을 등용해 경제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추진해 산업화와 사회의 근대화를 추구하면서 선진국 경제와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다.<sup>130)</sup>

또한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경제계획들을 조절하였다. 수입대체산업화에 의한 성장의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수출주도형 산업화에 의한 양적인 성장에 목표를, 중화학 공업발전에 의한 질적인 충실화에 두었으며, 중화학 공업발전의 연장과 함께 사회개발의 필요성과 사회구성원의 형평성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경제성장을 이끄는

130) 한국의 경제기획원은 1961년 7월 22일에 「국민경제의 부흥개발에 관한 종합적 계획의 수립과 그 실시에 따르는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하기 위해 건설부의 종합계획국, 물동계획국, 내부부의 통계국, 재무부의 예산국을 흡수하여 4국 19과의 골격으로 발족되었다. 김선명, 앞의 논문, p. 69.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제적인 성장은 자본·기술·시장·무역 등 모든 면에서의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제경제의 국내과급효과가 크고 아울러 수출경쟁력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점과 공업부문간, 공업부문과 농업부문간 투자와 수출입의 불균형이 크다는 점, 부와 권력이 편중되고 소득격차의 양극화에서 오는 사회불안이 커졌다는 점 등에서 양적 성장밖에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박정희가 추진한 경제발전은 이를 분석하기 위해, 동아시아 성장에 관한 한 가장 유력한 설명을 제시하고 후발산업화과정에서 국가의 전략적 시장개입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발전국가론을 등장시킬 만큼 매우 획기적인 것이었다.

피터 에반스에 따르면 경제성장의 견인차로 규정되는 발전국가는 혁신적 투자의 유인을 제공하고, 투자의 위험도를 낮춤으로써 민간자본이 장기적인 기업가적 시각을 갖도록 유도하며, 사회적 잉여를 특정한 이해집단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국민을 위해 사용한다는 점에서 경제혁신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설명하였다.

일본 식민지 시기와 한국전쟁을 겪은 한국은 국가의 안보와 근대화라는 제일의 사명감을 지닐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국가에 힘을 실어주게 되었다. 박정희 정권의 군부정권은 국가의 자율성이 최대로 보장받는 체제였으며, 경제개발계획의 실천과 경제기획원 등의 전문적인 경제관리기구를 구성하여 국가능력을 높였다. 물론 외자도입에 의한 자본의 확충과 중화학공업화의 추진이라는 박정희 자신의 확고한 경제발전의 의지를 보여주는 전략적 리더십도 함께 작용하였다.

## V. 네윈정권과 박정희정권의 경제성과 비교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버마와 한국의 군부정권의 등장배경과 경제체제, 그리고 국가성격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1962년 버마식 사회주의와 1974년의 버마식사회주의의 수정에 의한 버마의 경제성과와 1962년 이후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의해 경제계획을 진행한 한국의 경제성과에 대해 비교하고자 한다.

네윈은 1962년 쿠데타 당시, 독립 이후 버마국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민족주의적인 저항과 부자들에게 대한 저항에 힘입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선택하였다. 이는 버마의 오랜 외세의 침략에, 특히 영국에 대한 반감이 깊게 작용한 것이며,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던 버마가 당시 중국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선택에 호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네윈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선택에만 그치지 않고, 네윈만의 ‘버마식 사회주의’ 체제를 수립하였다. 농업이 잘 발달되어 있던 버마의 실정에 맞추어 스탈린식 사회주의 경제모델과는 달리, 집단농장을 형성하지 않고 농업의 착취를 통한 급속한 산업화에 기반을 두고 있는 네윈만의 사회주의적 경제모델을 확립한 것이다.

박정희의 1961년 쿠데타 당시, 한국은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으로 인해 미국에 영향을 받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미국의 정치·경제체제가 유입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생고 해결과 경제재건에 명분을 두고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에게는 선진국의 경제체제모델이 대안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버마와는 달리 경제적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기술과 자본이 부족했던 한국은 노동집약적인 수출산업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고 대외경제활동에 중심을 두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해 박정희는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초기 네윈의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의 기본원리가 그러하듯, 다수의 복지를 위하여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공유의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얻어진 이익을 전원이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네윈은 이 원리를 기본으로 식민지 유산을 타파하고 버마인 스스로 경제실현을 장악하여 민족주의적인 경제구조는 확립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들을 취해왔다. 농업정책, 국유화, 대외자립정책의 제도화는 그 나름대로의 설득력과 효용성을 갖고 있어 그 성공가능성에 많은 기대를 갖게 하기 충분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네윈의 버마식 사회주의는 버마의 전근대성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과학성도 갖추지 못한 무정형한 이념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러한 이념의 경직성과 모호함으로 사회주의의 추구라는 추상적 과제와 복지의 확대라는 구체적 목표를 실행 한다는 현실 사이의 격차를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다.<sup>131)</sup>

결국 1974년에 네윈은 자신의 버마식 사회주의의 모순을 인식하고 버마식 사회주의를 수정하게 된다. 경제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은 물론 군부 내부로부터의 상당한 도전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농업부문에서는 HYV프로그램을 통해 농업생산의 증가를 꾀하였으며, 산업부문에서도 네윈의 수정선언에 발맞추어 BSPP는 1977년 2월 제3차 당대회를 열어 인민복지의 이름으로 해외자본의 적극적인 유치와 국내 사적기업의 활동을 승인하는 신경제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부분적인 경제자유화 조치의 결과 버마의 외국 원조와 차관의 도입을 통해 공공부문과 농업생산의 투자를 늘여갈 수 있었고, 종자개량과 비료생산의 확대를 통해 농업생산량을 배가시킬 수 있었는가 하면 석유생산과 천연가스의 생산증대 등의 요인에 힘입어 기대 이상의

---

131) 실제로 사회주의는 그 이념적 모호함과 비과학성으로 1980년대 이전에 이미 중국과 헝가리, 유고슬라비아에서 새로운 수정사회주의를 선언하였고, 사회주의의 모체인 소련에서도 고르바초프가 ‘그라스노스트(개방)’와 ‘페레스트로이카(개혁)’ 신사고를 선언함으로써 붕괴되었다.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에 들어 버마의 경제는 다시 한번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버마 국가재정의 부족으로 HYV프로그램은 1980년대 중반에 들면서 더 이상 추진이 어려웠으며, 또한 1983년 이후에는 석유생산의 저하로 인해 운송비의 폭등과 쌀, 식용유 등 생필품 가격상승을 초래하면서 물자부족현상이 나타났으며, 1980년대 이후 급증한 외채의 증가로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경제위기는 버마국민들의 대규모 민중 봉기로 귀결되었다.

박정희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통해, 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하였다. 박정희 집권 18년 동안 (1962~1979) 국민총생산은 무려 27배가 증가하였고 경제성장률도 평균 8%로 높은 증가를 보였다. 박정희의 바람대로 한국은 신흥개발도상국으로 주목받는 국가가 되었다. 1차에서 4차까지의 박정희에 의해 추진된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성공적이었다. 이와 같은 경제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박정희 정권이 국가주도형 경제정책을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었다. 경제기획원을 두어 전문적인 지식인들을 등용해 경제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추진해 산업화와 사회의 근대화를 추구하면서 선진국 경제와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경제계획들을 조절하였다. 수입대체산업화에 의한 성장의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수출주도형 산업화에 의한 양적인 성장에 목표를, 중화학 공업발전에 의한 질적인 충실화에 두었으며, 중화학 공업발전의 연장과 함께 사회개발의 필요성과 사회구성원의 형평성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경제성장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이다.

네윈정부는 피터 에반스가 지적했듯이 사회로부터 거대한 양의 투자 잉여를 추출하지만 그것을 경제혁신에 필요한 집합재로 공급할 수 없었고, 발전목표를 추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자율성, 능력에 한계를 나타냈다. 모든 산업의 국유화나 공출제도를 통한 농업이익의 확보 등 국가가 거대한 양의 잉여를 획득할 수 있었으나, 군부에 의한 중앙권력의 독점으로 인한 그들의 무능과 비효율로 인해 버마의 경제를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버마식사회주의의 수정을 추구하기 이전에는 그렇다할 경제의 가장 기본인 경제개발계획도 없었으며, 모든 경제정책은 버마식사회주의의 기초에 따라 체계적이지 못하였고, 비과학적이었으며, 무정형한 정책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본다면 네윈정권은 중앙지도기관으로서 산업의 혁신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약탈국가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에반스에 따르면 경제성장의 견인차로 규정되는 발전국가는 혁신적 투자의 유인을 제공하고, 투자의 위험도를 낮춤으로써 민간자본이 장기적인 기업가적 시각을 갖도록 유도하며, 사회적 잉여를 특정한 이해집단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국민을 위해 사용한다는 점에서 경제혁신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설명하였다. 일본 식민지 시기와 한국전쟁을 겪은 한국은 국가의 안보와 근대화라는 제일의 사명감을 지닐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국가에 힘을 실어주게 되었다. 박정희 정권의 군부정권은 국가의 자율성이 최대로 보장받는 체제였으며, 경제개발계획의 실천과 경제기획처 등의 전문적인 경제관리기구를 구성하여 국가능력을 높였다. 물론 외자도입에 의한 자본의 확충과 중화학공업화의 추진이라는 박정희 자신의 확고한 경제발전의 의지인 전략적 리더십도 함께였다. 물론, 박정희정권의 국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의미에서 약탈국가와 동일하지만 발전목표를 추진할 수 있는 자율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질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버마와 한국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선택으로, 국가의 성격은 약탈국가와 발전국가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네윈과 박정희의 각기 다른 선택은 상이한 경제성과를 가져왔다.

버마와 한국의 주요 경제지표들을 비교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표-18> 버마와 한국의 GDP(국내총생산)비교 (단위: 억 달러)

연도	버마	한국
1970	21	81
1971	21	95
1972	19	107
1973	23	137
1974	39	192
1975	36	215
1976	40	296
1977	41	379
1978	46	531
1979	53	633
1980	58	638
1981	58	714
1982	60	762
1983	61	845
1984	64	932
2004	-	6801

출처 : *Khin Maung Nyunt*, 앞의 책, p.121; 통계청, <통계자료: GNI·GDP 등 주요지표>, 2005. [www.nso.go.kr](http://www.nso.go.kr) (2005.8.10).

1970년대 버마의 GDP는 총 21억 달러에서 64억 달러로 약 3배의 증가에 그쳤으나, 한국은 81억 달러에서 932억 달러로 약12배나 증가하였다. 버마는 폐쇄적인 사회주의경제정책이긴 하나, 1974년 버마식사회주의의 수정을 채택하였을 때는 다소 높은 성장률을 보이기도 하였다.

<표-19> GDP성장률 (단위: %)

국가	1963-73	1974-80	1980-86
버마	2.9	6.8	4.9
한국	10.8	9.9	8.2

출처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83, 1988.  
www.worldbank.org (2005.8.27)

<표-20> GDP별 생산구조 (단위: %)

	GDP(억달러)		농업(%)		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1965	1986	1965	1986	1965	1986	1965	1986	1965	1986
버마	16	81	35	48	13	13	9	10	52	39
한국	30	981	38	12	25	42	18	30	37	45

출처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88. p. 226~227.  
www.worldbank.org (2005.8.27)

한국의 GDP별 생산구조는 산업과 제조업 부문이 증가했지만, 버마는 농업부문만이 증가했고, 산업과 제조업 부문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또한 근대화과 경제성장의 하나의 지표인 도시화에서도 버마와 한국은 차이를 보인다.

<표-21> 버마와 한국의 도시화 (단위: %)

	도시 인구			
	총인구 (%)		연평균증가율(%)	
	1965	1988	1965~80	1980~88
버마(미얀마)	21	24	3.2	2.3
한국	32	69	5.8	3.7

출처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89, p. 254~255.  
[www.worldbank.org](http://www.worldbank.org) (2005.10.5)

도시화는 공업국가의 발전 양상을 보여주는 기준이다. 특히 한국은 1965년부터 1980년대까지 수출중심과 중화학정책으로 인해 많은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었고 연 5.8%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버마와 한국의 경제체제는 대외경제정책의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네윈의 자립외교노선과 박정희의 대외무역정책이 대조를 이루면서 무역부문에 많은 차이를 보였다.

<표-22> 버마와 한국의 무역증가율 (단위: %)

국가	수출			수입		
	1960-70	1970-80	1980-86	1960-70	1970-80	1980-86
버마	-11.6	1.3	-8.8	-5.7	-2.8	-8.8
한국	33.4	22.0	13.1	20.6	10.9	9.3

출처 : Chris Dixon, *South East Asia in the World-Econom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p. 19,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83 ;1986 ;1988. www.worldbank.org (2005.9.18)

<표-23> 상품무역 증가액 (단위: 백만 달러)

	수출(1988)	수입(1988)
버마	299	611
한국	60,696	51,811

출처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89*. p. 204~205.  
www.worldbank.org (2005.9.21)

1988년에 버마가 사회주의 노선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기 전까지, 버마의 무역수지는 모두 적자였고, 한국은 수출액과 수입액이 버마에 비해 약 200배와 85배나 높았다. 폐쇄적인 버마식 사회주의와 대외개방적인 경제정책의 결과였다. 세계무역에서 버마와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과 같다.

<표-24> 세계무역 (단위: 억 달러)

		1982	1987	1992
세계	수출	1731.5	2360.7	3761.6
	수입	1816.7	2422.1	3783.8
버마	수출	0.404	0.219	0.466
	수입	0.435	0.268	0.850
한국	수출	21.853	47.281	76.632
	수입	24.251	41.020	81.775

출처 : The Government of The Union of Myanmar, 앞의 책, p. 137~138.

위와 같은 경제성과들의 차이로 인해 버마는 1987년 유엔으로부터 세계최빈국(Least Less Developed country: LLDC)에 지정되었으며, 한국은 1980년에 신흥공업국가(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MCS)로 인정받게 되었다. 정치적으로도 버마는 1997년에 네윈의 BSPP를 대신해 국가평화발전평의회(the 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SPDC)라는 또 다른 군부정권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한국은 자유선거에 의해 선출된 참여정부가 민주정권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두 국가의 경제체제의 선택과 국가 성격의 차이에 따른 상이한 경제성과의 결과인 것이다.

네윈이 버마식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확립을 내걸고 나선 이후부터 1974/1975년 사이의 13년 동안 연평균 GDP성장률은 불과 2.9%에 그쳤고, 1인당 GNP증가율은 총 9%에 불과했다. 투자 성장률은 연평균 1.2%에 머무르고, 쌀 수출량도 전의 300만 톤 수준에서 1972/73년의 65만 톤으로 감소했다. 쌀 수출의 감소는 인구증가와 공출제도의 결합 제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자력갱생 원칙에 따라 경제개발을 수행하려면 투자재원이 부족한 후진국으로서의 외국원조나 강제저축에 의존하기 마련인데 버마는 부족한 외화를 얻기 위해 농민수탈에 의한 쌀수출을 감행한 것이다. 이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쌀을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없었으며, 암시장의 비싼 쌀에 의존하던 도시 소비자들과 공출제도에 불만이 있던 농민들의 원성이 커져갔다. 사회주의경제체제의 일환으로 국유화한 자본과 기업, 역시 전 국민의 소유가 아니라 소수 군부 통치자들의 사유물이 되어 국민들의 불만을 샀다. 결국, 1974년부터 도시 노동자들과 학생의 파업이 점차 빈발하면서 네윈 체제는 점차 흔들리게 된다.

네윈은 국민들에게 유화책으로 1974년 1월 신헌법을 제정하고 3월 총선거를 실시하여 인민의회를 구성하였다. 즉 형식적인 민정 이양을 이룬 것이다. 그러나 네윈은 여전히 BSPP 의장과 국가평의회 의장(대통령)을 겸직한 채 절대 권력을 유지하면서 전 국가를 통제하였다. 그러나 12년 동안 억압되었던 국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민정 이양 직후인 1976년 3월부터 1975년까지 네윈 정권 타도, 민주주의 확립 등의 구호를 외치는 학생, 승려, 노동자들 시위와 파업이 잇따르자, 이에 맞서 정부는 휴교령, 폐교 조치를 반복하고 양곤에서는 경찰의 발포로 유혈 참사가 발생하는 등 시위 학생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네윈체제에 대한 불만은 대위급 청년 장교들 사이에서도 발생하였다. 이들은 1976년 네윈을 암살하고 신정권을 수립하여

국민경제의 파탄과 속박을 타파하고, 자유주의 경제제도의 부활과 개방 정책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사전에 발각되어 처형당하거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졌다.<sup>132)</sup>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함께 최악의 경제난이 버마를 휩쓸었다. 1987년 말부터 1988년 초까지 물가부족과 농민의 쌀 출하 기피, 수송기능 미비로 물가는 폭등을 거듭하였다. 지역에 따라 쌀 가격은 400%나 상승했고 가솔린가격은 공시가가 갤런 당 3.5짜트였던 데 반해 암시세는 지역에 따라 30~90짜트로 치솟았다. 봉급생활자는 자유시장 가격으로 생필품을 구입할 경우 한달 봉급으로 단 며칠 밖에 살아갈 수 없게 되고 극도의 혼란과 절망감이 전국을 휩쓸었다.<sup>133)</sup> 1988년 4월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여사가 귀국하였고, 6월에는 전국적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여 휴교조치가 내려졌다. 의회는 1988년 7월 26일 선거에서 네윈을 버마연방정부의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지만 국민들의 반발에 따라 18일 만에 물러났다.<sup>134)</sup> 1988년 8월 8일에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 시민들에게 무자비한 발포로 약 1천명이 사망하였고, 8월 19일 민간인 출신 마웅 마웅(Maung Maung)을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1988년 9월 18일 네윈의 사주로 소 마웅(Saw Maung)장군이 이끄는 군부가 친위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the State Law and Order Restoration Council: SLORC)를 최고 통치기구로 내세워 군인들이 수상이하 모든 요직을 차지하였다.<sup>135)</sup> 쿠데타로 집권한 BSPP의 해체를 선언하고, ‘버마식 사회주의’ 노선을 공식적으로 포기했다. 이로 인해 26년에 걸친 네윈의 ‘버마식 사회주의’ 실험은 실패로 끝이 났다. SLORC는

132) 한국 엠네스티 4그룹, 앞의 책, pp. 46~47.

133)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연구원, 앞의 책, p. 121

134) U Thaung, 앞의 책, p. 16.

13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앞의 책, p. 33.

법과 질서를 회복시키며, 자유시장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SLORC 역시 내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군부체제를 유지하고 있다.<sup>136)</sup> 그리고 같은 군부세력인 BSPP는 민족통일당(National Unity Party: NUP)으로 이름만 바꾼 채 활동하고 있으며, 내전의 실질적인 세력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1988년의 버마의 민주화운동은 아무것도 바꾸어 놓지 못했던 것이다.<sup>137)</sup>

SLORC은 기존의 군부정권과는 차별화를 두기 위해 1989년에 국명을 미얀마(Myanmar)로 바꾸며, 국민들의 회유책으로 선거를 제시, 1990년대 총선을 실시하였으나 1990년 5월 총선에서 여당인 NUP가 야당인 아웅산수지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MLD)이 90%라는 압승을 하자 이를 인정하지 않고 군부지배를 지속하였다. 1997년 11월에 SLORC은 기존 헌법을 정지시키고 의회를 해산하며, 기존의 SLORC를 대신해, ‘국가평화발전위원회’(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SPDC) 체제로 개편하게 된다.

버마가 심각한 경제난에 의해 민주화열기를 겪은 데에 반해, 한국은 정치적 자유에 대한 열망에 의한 민주화운동이 진행되었다. 경제적인 면에서 박정희는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통해 한국을 후진국에서 신흥개발도상국으로 올려놓았다. 박정희가 이뤄 놓은 경제적 성과들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박정희는 집권기간 내내 야당은 물론 각 분야의 비판적 지식인들과 사회집단들의 격렬한 정치적 반대와 반독재투쟁으로 계속 도전받았다. 박정희는 이에 대해 철저한 물리적 탄압과 강경대책으로 대처하여 국민들의 불만을 샀다.

---

136) Chao-Tzang Yawngwe,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ism: The State and Political Soldiers in Burma, Indonesia, and Thailand,"*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1997), pp. 69~70.

137) 김희오, 『제3세계정치론』 (서울: 백산출판사, 1999), p. 129.

또한 가난 극복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율적인 경제성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의 경제개발방식인 수출주도형 불균형적 산업화전략은 수많은 반대세력을 등장시켰다. 사회복지비의 증대, 환경보호,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용자에 대한 규제강화 요구는 무시되었으며, 농업부문과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요구는 공업화를 위해 필요한 정도로만 제한되었다. 또한 내수산업은 수출주도 발전전략 때문에 경시되었다.<sup>138)</sup> 지역간불균형성장, 재벌편중, 및 소득불균형현상으로 환경파괴 등 산업화의 부작용 혹은 부산물을 사전에 고려하는 것도 미비했다.

박정희는 민주주의를 위한 목적에서 경제성장을 시도했다고 하지만 경제성장에 따라 행정의 탈권위주의화와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자발적 참여를 점진적으로 고양하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완전한 경제발전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와중에 박정희 정권은 국가와 사회의 안정을 위해 1971년 10월 15일 계엄령을 선포한 것을 시작으로, 동년 12월 6일의 국가비상사태 선포, 1972년 8월 3일 8·3긴급명령 발표하여, 마침내, 11월 22일 유신헌법안을 확정시키며 유신체제를 시작하였다.<sup>139)</sup>

유신체제하에서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재야인사들과 학생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저항 그리고 정부가 긴급조치 발동으로 이에 대응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정치, 사회적 불안이 계속되었다. 1975년 8월 15일의 대통령부인 육영수 여사의 피살, 1975년의 베트남 패망, 휴전선에서의 땅굴발견 등으로 안보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유신반대운동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70년대 후반부터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요구와 이를 탄압하는 정부에 대한 저항이 계속되고 천주교, 개신교 등의 종교지도자들이 이들에 동조하여 유신반대운동을 계속하면서 1978년, 79년에는 또다시 정국의 불안이 심

---

138) 정정길, 앞의 책, p. 83.

139) 신명순, 앞의 책, p. 231.

각해졌다. 더구나 YH여공사건, 야당당수로 복귀한 김영삼의 국회의원제명, 부마사태 등으로 정국이 혼란에 빠져드는 속에 1979년 10월 박대통령이 암살됨으로써 유신시대는 막을 내리게 된다.<sup>140)</sup>

박정희의 가장 큰 딜레마는 경제발전이 진척될수록 사회적 및 정치적 다원주의가 발달할 뿐 아니라 그러한 다원주의적 세력의 증원화가 가능해진다는 문제였다. 박정희의 의도와는 다르게 경제발전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광범한 질적 및 양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것이 정권과 반대세력간의 갈등을 형성하는 균열노선이나 기반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여권과 야권이라는 대립과 함께 소위 범주적 집단(*categorical groupings*)이라고 부를 수 있는 노동단체, 농민협동조합, 학생단체, 생산결사체, 또는 전문직연합체 같은 직업이나 경제적 이익을 토대로 결성하는 집단이 정치적으로 적대성을 갖게 되었다.<sup>141)</sup>

그러나 박정희는 이러한 집단들의 요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완강했다. 경제정책의 경우도 정책내용에 대한 야당의 조직적인 반대도 없고, 언론의 비판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가운데 청와대의 경제비서관들과 경제부처의 기술관료진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이었다.<sup>142)</sup> 결국,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는 중앙정보부장이던 김재규가 쏜 총탄에 의해 시해되었다. 이 시해사건으로 1961년 5·16쿠데타 이후 근 20년간 박정희를 정점으로 한 군부정권 시대는 끝나게 되었으나, 경제개발방식은 경제사회개발계획으로 수정되어 지속되었다.

1979년 10·26 이후 전두환의 12·12 사건으로 군부세력이 또다시 등장하였다. 1981년 선거로 전두환은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되었고 5공화국이 출범

---

140) 정정길, 앞의 책, p. 32~33.

141) 한배호, 앞의 책, p. 242.

142) 한배호, 앞의 책, p. 343.

되었다. 그러나 전두환은 5·18광주항쟁 등 잇단 국민들과 야당 정치인들의 공세에 밀려 7년 단임제로 임기를 마치고, 1988년 국민직선으로 노태우의 6공화국이 등장했다. 6공화국은 5공화국 때와는 달리 법적·제도적 장치와 절차면에서 민주주의로 나아가려고 했으나, 노태우 자신이 군인이었다는 정당성의 결핍을 극복할 수 없었다.

1992년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김영삼정권은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지니며, 30년간의 군부지배를 청산하고 문민시대를 열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이후 1997년 김대중정권과 현재 노무현정권까지 한국은 지속적으로 선거와 평화적인 정권교체로 민주주의를 확립하였고 경제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 V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버마와 한국의 1960년대 군부정권의 쿠데타 및 등장배경에 대해 알아본 뒤, 이들 군부정권의 경제체제의 선택과 국가성격에 따른 각기 상이한 경제성과 등을 살펴보았다.

먼저, 버마와 한국은 시기적인 면에서 군부정권의 등장과 지배라는 측면에서는 상호 유사하였다. 그러나 3·2 쿠데타에 의한 네윈의 군부정권 등장은 군부와 정부의 갈등으로 군부의 이익이 정부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군부가 정치에 개입한 것이며, 5·16 쿠데타에 의한 박정희의 군부정권 등장은 국가의 정치·경제·사회적인 혼란을 극복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게 된 것으로 차이가 있다.

근대화를 추진하려던 군부정권은 각각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를 선택하였다. 지리적 이점이 뛰어나고 경제적 자원이 풍부하며 경제상황이 나았던 버마는 자립경제원칙인 버마식 사회주의를 내세워 폐쇄적인 경제개발정책을 내세웠고, 한국은 부족한 자원과 극빈한 경제상황으로 외자의 유치를 통한 대외개방적인 자본주의적 경제개발정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 각각의 경제체제들은 좀 더 세부적으로 경제정책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것에 대한 경제성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1962년에 네윈에 의해 발표된 버마식 사회주의는 농업화와 국영화, 자립경제정책을 기본으로 추진되었으나, 곧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고 말았다. 농업정책의 하나인 공출제도의 실패로 농민들과 국민들이 불만을 가졌으며, 비전문적인 군인들의 기업경영은 곧 국영화 정책의 실패도 가져왔다. 특히, 자립경제정책은 농업이익의 착취를 통한 국가재정의 확충으로 산업과 공업화를 발전시키고자 했으나, 농업정책의 실패로 이마저 어려워졌다.

버마식 사회주의의 실패에 네윈은 1974년 버마식 사회주의의 수정을 제시하였다. 경제개발4개년계획을 추진하였으며, 사기업의 활동을 부분적으로나마 허가하였다. 또한 HYV프로그램을 농업에 적용시켜 경기가 회복세에 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자재와 자본의 부족으로 이마저도 어렵게 되었다. 결국 1987년 버마는 세계최빈국(LLDC)로 공식 지정을 받게 되었다. 최악의 경제난 속에 1988년 버마의 민주화 물결로 네윈은 물러났으며, 새롭게 등장한 SLORC은 대외개방적인 경제체도로의 전환을 주장해 버마식 사회주의는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반면에 박정희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추진해 산업화와 사회의 근대화를 추구하면서 선진국 경제와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정부의 주요한 경제기능과 결과에 따라 그 목표가 변경되었다. 1960년대는 외자도입 및 국가주도 배분 체계로서 수출지향적인 산업구조를 정비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1970년대는 중화학공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의 확립하였다. 이 목표를 위해 박정희는 외자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해외시장 개척에 의한 수출축진을 도모하려는 수출주도형 또는 외부지향적 공업화정책으로서 수입대체산업화, 수입대체산업의 수출산업화, 농업근대화, 사회개발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전략을 채택하게 된 배경은, 자본과 부존자원이 절대적으로 빈곤한 반면에 값싼 노동력이 풍부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전략은 연 9%의 경제성장이라는 결과를 안겨주었다.

이러한 경제정책의 성과는 경제체제의 선택 뿐만 아니라 경제체제 속의 국가의 성격 차이에서도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의 성격은 주로 발전국가와 약탈국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은 국가의 자율성과 국가능력, 그리고 발전지향적인 리더십의 결합 유무이다.

네윈정부는 사회로부터 거대한 양의 투자 잉여를 추출하지만 그것을 경제혁신에 필요한 집합재로 공급할 수 없었고, 발전목표를 추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자율성, 능력에 한계를 나타냈다. 더욱이 네윈, 자신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저력을 보이지 못했다. 모든 산업의 국유화나 공출제도를 통한 농업이익의 확보 등 국가가 거대한 양의 잉여를 획득할 수 있었으나, 군부에 의한 중앙권력의 독점으로 인한 그들의 무능과 비효율로 인해 버마의 경제를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버마식사회주의의 수정을 추구하기 이전에는 그렇다할 경제의 가장기본인 경제개발계획도 없었으며, 모든 경제정책은 버마식사회주의의 기초에 따라 체계적이지 못하였고, 비과학적이었으며, 무정형한 정책이었다. 네윈정권의 버마는 국가자율성은 갖추었지만, 국가능력의 부재, 리더십의 무능으로 약탈국가의 성격을 가진 것이다.

박정희정권은 역사적인 이유로 국가의 자율성이 최대로 보장받는 체제였으며, 경제개발계획의 실천과 경제기획처 등의 전문적인 경제관리기구를 구성하여 국가능력을 높였다. 물론 외자도입에 의한 자본의 확충과 중화학공업화의 추진이라는 박정희, 자신의 확고한 경제발전의 의지가 담긴 전략적 리더십도 함께 작용하였다. 박정희정권의 한국은 발전국가의 조건인 국가자율성과 국가능력, 발전지향적 리더십이 모두 적용되어 발전국가적 국가성격을 띄게 된 것이다.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버마와 한국은 사회주의경제체제와 자본주의경제체제의 선택으로, 국가의 성격은 약탈국가와 발전국가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네윈과 박정희의 각기 다른 선택은 상이한 경제성과를 가져왔다. 경제성과들의 차이로 인해 버마는 1987년 유엔으로부터 세계최빈국(LLDC)에 지정되었으며, 한국은 1980년에 신흥공업국가(MICS)로 인정받게 되었다.

정치적으로도 버마는 네윈의 BSPP를 대신해 SPDC라는 또다른 군부정권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한국은 자유선거에 의해 선출된 참여정부가 민주정권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두 국가의 경제체제의 선택과 국가 성격의 차이에 따른 상이한 경제성과의 결과인 것이다.

## 참고자료

### <국문단행본>

- 강광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강성재. 『쿠데타 권력의 생리』. 서울: 동아일보사, 1987.
- 김대환. 『발전경제학』. 서울: 경문사, 1998.
- 김대회·조희연 공저. 『동아시아 경제변화와 국가의 역할 전환』. 서울: 한울  
2002.
- 김명섭 외. 『1970년대 후반기의 정치사회변동』. 서울: 백산서당, 1999.
- 김병국. 『분단과 혁명의 동학-한국과 멕시코의 정치경제』. 서울: 문학과 지  
성사, 1994.
- 김석준 외. 『국가와 공공정책』. 서울: 법문사, 1993.
- 김성주 외. 『동남아의 정치리더십』. 서울: 서울프레스, 1996.
- 김성진 편저. 『박정희시대』. 서울: 조선일보사, 1994.
- 김영봉 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서울: 세경사, 1989.
- 김웅진·박찬욱·신윤희 편역. 『비교정치론강의 2』. 서울: 한울, 1998.
- 김일영. 『건국과 부국 : 현대한국정치사 강의』. 서울: 생각의 나무, 2004.
- 김호진. 『한국정치체제론』. 서울: 박영사, 1997.
- 김희오. 『제3세계정치론』. 서울: 백산출판사, 1999.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얀마 편람』. 서울: 오름시스템, 1994.
- 로널드 칠코트. 강문구 역. 『비교정치학 이론』. 서울: 한울, 1999.
- 로버트 길핀. 고현욱외 역. 『세계정치경제론』. 서 : 인간사랑, 2004.
- 민준기 외. 『한국의 정치』. 서울: 나남, 1996.

- 메이슨 외. 『한국경제, 사회의 근대화』.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85.
- 박명광.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경험과 미래』. 서울: 다나, 1990.
- 박정희. 『국가와 혁명과 나』. 서울: 지구촌, 1997.
- 배궁찬 외. 『1970년대 전반기의 정치사회변동』. 서울: 백산서당, 1999.
- 배링턴 무어. 진덕규 역. 『독재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원』. 서울: 까치, 1999.
- 백영철. 『제2공화국과 한국민주주의』. 서울: 나남, 1996.
- 백영철 외. 『한국정치경제의 위기와 대응』. 서울: 오름, 2001.
- 사뮤엘 P. 헌팅턴. 배성동외 역. 『정치발전론』. 서울: 을유문화사, 1971.
- 손호철. 『한국정치학의 새 구상』. 서울: 풀빛, 1991.
- 스테판 해거드. 박건영·강문구·양길현 역. 『주변부로부터의 오솔길-신흥공업국의 정치경제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5.
- 신명순. 『제3세계정치론』. 서울: 법무사, 1988.
- 신봉길. 『시간이 멈춘 땅, 버마』. 서울: 한나래, 1991.
- 아담 쉐보르스키. 임혁백·윤성학 역. 『민주주의와 시장』. 서울 : 한울 1997.
-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연구원. 『버마현대사-‘버마식 사회주의’와 버마 민중 항쟁』. 서울 : 소나무, 1989.
- 양길현 외. 『동남아의 정치변동』. 서울: 서울프레스, 1994.
- 오도넬·슈미터·화이트헤드. 엄홍철 역. 『권위주의 정권의 해체와 민주화』. 서울: 한울, 1987.
- 윤진표 외. 『동남아의 정당정치』. 서울: 오름, 2001.
- 이병천 외. 『개발독재와 박정희시대 : 우리시대의 정치적 기원』. 서울: 창비, 2004.

- 이진곤. 『한국 정치리더십의 특성』. 서울: 한울, 2003.
- 임현진. 『제3세계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3.
- 정운현. 『실록 군인 박정희』. 서울: 개마고원, 2004.
- 정정길. 『대통령의 경제리더십: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경제정책관리』.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4.
- 조희연. 『한국의 국가·민주주의·정치변동』. 서울: 당대, 1998.
- 최평길. 『대통령학』. 서울: 박영사, 2002.
- 클라이브 토마스. 나종만·김형균 역. 『권위주의국자와 민주주의』. 서울: 여림3미디어, 1993
- 클라크 네이저. 동남아시아연구회 역. 『현대동남아의 이해』. 서울: 서울프레스, 1993.
- 프랭크 윌슨. 이명남·김왕식 역. 『비교정치학』. 서울: 동명사, 1999.
- 프레드 R 폰테어 메덴. 이춘근·남궁근 역. 『개발도상국 정치론』. 서울: 평민사, 1981.
- 하신기. 강태훈·이광주 역. 『박정희』. 서울: 세경사, 1997.
- 한국 엠네스티 4그룹. 『내릴 수 없는 깃발, 미얀마』, 서울: 두리미디어, 2000.
- 한배호 편. 『한국현대정치론 II-제3공화국의 형성, 정치과정, 정책』. 서울: 오름, 1996.
- 한배호. 『한국정치변동론』. 서울: 법문사, 1994.
- 한석태 외. 『버마의 정치와 경제-버마식 사회주의』.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1.
- 홍철. 『군부정치개입의 이론과 사례분석』. 서울: 중문, 2005.
- S.E. 화이너. 김영수 역. 『현대정치와 군부 : 군부정치의 비교정치학적 분

석』. 서울: 현암사, 1989.

#### <국내 학위 및 학술논문>

- 김광웅. “관료와 정책-3·4공화국의 경제발전 정책을 중심으로.” 「행정논집」 제28권 1호 (1990).
- 김병국. “국가구조와 국가능력 : 한국과 멕시코의 대외불균형관리정책의 비교 연구.” 「한국과 국제정치」 제4권 1호(1988, 봄).
- 김선명. “한국 발전국가시기(1960-1979) 산업화의 정치경제: 국가·자본·노동 관계를 중심으로.” 「연세사회과학연구」 제6집 (2000).
- 김일영. “한국에서 발전국가의 기원, 형성과 발전 그리고 전망.”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3집 1호 (2001).
- 김주홍. “박정희정권 하에서의 군부의 정치화 과정.” 정치학석사논문, 울산대대학원, 2001.
- 김태수. “에반스의 국가자율성 개념에 대한 연구.” 「한국 사회와 행정 연구」 제13권 3호 (2002.11).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세계비즈니스정보: 버마」, 2001.
- 박은홍. “발전국가론 재검토: 이론의 기원, 구조, 그리고 한계.” 「국제정치논총」 제39집 3호 (1999).
- 신동혁. “미얀마의 민주화 이행과정에 대한 분석.” 정치학석사논문, 중앙대 대학원, 1996.
- 양길현. “제3세계 민주화의 정치적 동학 비교연구: 한국, 니카라과, 미얀마의 경험을 중심으로.” 정치학박사논문, 서울대대학원, 1996.
- 양재진. “발전이후 발전주의론: 한국 발전국가의 성장, 위기, 그리고 미래.”

- 「한국행정학보」 제39권 1호 (2005).
- 외교통상부. 「미안마개황」, 2003.2.
- 윤상우. “동아시아 발전국가론의 비판적 검토.” 「경제와 사회」 제1집 1호 (2001,여름).
- 이강로. “제3공화국(1963-1972) 정치제도의 정통성과 박정희정부.” 「한국정치학회보」 제31집 4호 (1997).
- 이대규. “군부정치개입원인의 비교연구: 폴란드·태국·한국.” 「21세기정치학회보」 제13집 1호 (2003).
- 이병승. “버마 사회주의 경제의 정체성 : 농업정책을 중심으로.” 「동남아연구」 제1권 (1991.12).
- 장준영. “버마 정치에 있어서 종교와 상징: 1988년 민주화 요구 시위사례를 중심으로.” 정치학석사논문, 서강대학교대학원, 2002.
- 정윤재. “제3,4공화국의 성격과 리더십.” 「동북아연구」 제1집 1호 (1994).
- 조흥국. “탈식민지시대의 버마 군부에 대한 역사, 사회문화적 고찰.” 「민족과 문화」 제2집 (1994).
- 탁희정. “유신시대 박정희 통치이념의 역할: 1973~1976년을 중심으로.” 정치학석사논문,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2002.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의 주요국별 쌀 생산 및 교역 현황」. 1992.

<영문단행본>

- Christina Fink. *Living Silence: Burma under Military Rule*. London: Zed Books, 2001.
- Chris Dixon. *South East Asia in the World-Economy*.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 David I. Steinberg. *The Future of Burma : Crisis and Choice in Myanmar*. New York: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0.
- \_\_\_\_\_. *Burma's Road Toward Development, Growth and Ideology Under Military Rule*.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1987.
- D.R. SarDesai. *Southeast Asia - past & present*. Fourth Edition, Bangkok :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O.S. Printing House, 1997.
- Guy Hunter. *South-East Asia : Race, culture, and Nati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6.
- Harriet O'Brien. *Forgotten Land - A Rediscovery of Burma*. London: Michael Joseph, 1991.
- John Seabury Thomson, *Marxism in Southeast Asia - A Study of Four Countries*.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5.
- Josef Silverstein. *Independent Burma at forty Years: Six Assessments*. Ithaca: Cornell Southeast Asia Program, 1989.
- Khin Maung Nyunt. *Market Research of Principal Exports and Imports of Burm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ailand (1970/71 to 1985/86)*. Bangkok: Institute of Asian Studies Chulalongkorn University, 1988.
- Maung Maung. *Burma and General Ne Win*. Rangoon: Religious Affairs Dept. Press, 1968.
- Robert H. Taylor, *The State in Burma*. London: Orient Longman Limited,

1987.

The Government of The Union of Myanmar. *Statistical Abstract 1996*.

Yagon: Central Statistical Organization, 1996.

U Thaug. *A Journalist, a General and an Army in Burma*. Bangkok: White Lotus, 1995.

<영문학위 및 학술논문>

Chao-Tzang Yawngwe.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ism: The State and Political Soldiers in Burma, Indonesia, and Thailand."*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1997.

Jayshri H. Patel. *"A Burkean Analysis of Aung San Suu Kyi's Leadership Role in Political Development of Burma."* MA Thesis, University of Texas-Pan American. 2005.

Kyi May Kaung. *"Modernization, Breakdown and Structural Configurations: Retrogression in Burma(1962-88)."*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4.

Mary Patricia Challahan. *"The Origins of Military Rule in Burma."*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rnell, 1996.

Maung Thawngmung. *"Paddy Farmers and the State: Agricultural Politics and Legitimacy in Rural Myanmar."*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2001.

<인터넷자료>

국가기록원(박정희) [www.archives.go.kr](http://www.archives.go.kr)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 [www.unctad.org](http://www.unctad.org)

국회도서관 [www.nanet.go.kr](http://www.nanet.go.kr)

누리미디어 [www.dbpia.co.kr](http://www.dbpia.co.kr)

네이버 [www.naver.com](http://www.naver.com)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http://www.kiep.go.kr)

미국중앙정보국 [www.cia.com](http://www.cia.com)

박정희인터넷기념관 [www.516.co.kr](http://www.516.co.kr)

세계은행 [www.worldbank.org](http://www.worldbank.org)

야후 [www.yahoo.co.kr](http://www.yahoo.co.kr)

통계청 [www.nso.go.kr](http://www.nso.go.kr)

한국은행 [www.bok.or.kr](http://www.bok.or.kr)

한국학술정보 <http://kiss.kstudy.com>

##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Military Regime of Burma and Korea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Economic Performance of Newin and  
Park Jung Hi Regime*

Hyun-Jung Kim

Dep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thesis is focused on characteristics and economic policies of the military regime which emerged through the coup in Burma and Korea that had become independent after the World War II.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the coup, which caused the military to engage in the politics in Burma and Korea, are examined at first. Then this paper carries on a comparative study of two cases analysis by examining economic performances derived from the economic system and the state character which two military regimes chose.*

*The research period of this comparative study is dealt with Newin and Park Jung Hi government which were formed from the coups in the early 1960's of Burma and Korea. This study sets up an analytical framework to consider economic systems of 'capitalism and socialism' and state character of 'plunderous state and developmental state' as independent*

variables to explain the economic performances of the military regimes.

Burma and Korea share a high level of comparability in various aspects. Both countries experienced the colonial period and got independent in 1940's. Parliamentary democracy continued in the 1950's and the military held the power by the coup in the 1960's. The resistance occurred against the military regime since the 1970's. But the economic situations of two countries were very different in contrast with the political and historical similarities. Burma had more advantages than Korea in the economic field after the independence. Burma was the top rice exporter in Asia and had lots of economic resources. Under the favorable conditions, U Nu government ruled over Burma in the 1950's and *Newin's* military regime was established through the coup in 1962. The *Newin* government adopted a modified Burma-style socialism. This ideology meant to develop the Burmese economy independently from the external influences. However, the socialism of the *Newin* government caused a series of economic stagnation during 30 years afterwards and was eventually changed into the economic crisis. That was finally proven to be a complete failure after the people's uprising in 1988.

On the other hand, Korea had to endure many hardships due to insufficient economic resources and unfavorable geopolitical situation. The military regime drove the export oriented economic development plan after the coup of Park Jung Hi in 1961. Rapid industrialization and social modernization enabled Korea to cooperate with advanced countries more strongly than the past. The strategy was resulted in the remarkable

economic growth of 9% average growth rate.

In this thesis, the different economic performances of Burma and Korea are analyzed with the economic system and the state character which the military regimes chose. The military regime of Burma and Korea took socialism and capitalism respectively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moder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Burma selected an agricultural development policy on the basis of the self-sufficient socialism. On the other hand, Korea carried out a capitalist development plan with open economy concept to attract foreign capital. Although two economic systems were executed with various economic policies, the outcomes were quite different. The differences were derived not only from the economic system but also from the state character. The state character is classified into developmental and plunderous state, which is evaluated by the concepts of state autonomy, state capacity and leadership.

The *Newin* government was able to make a lot of surplus value by industrial nationalization and monopolistic agricultural distribution system. But the Burmese economy became declined by inability and ineptitude of the *Newin* government. *Newin* failed to show any potentiality to enforce economic policies with strong will and exhibited insufficient leadership to avoid responsibility and depend on superstition. Burma under the *Newin* government had state autonomy from the society, but it was not efficient enough to save the deteriorating economy due to the characteristic of plunderous state with absence of state capacity and leadership.

The *Park* government had state autonomy compared with the society

from *the historical perspective and increased state capacity through establishing state agency like Economic Planning Board. The military regime poured capital investment into the heavy industry with strong leadership. The military regime could be called developmental state equipped with leadership, state autonomy and capacity.*

In conclusion, *the economic performances of Burma and Korea were the outcomes of different economic systems such as socialism and capitalism and different state characters such as plunderous state and developmental state. These resulted Burma to be appointed as the Least Developed Country from the UN in 1987 and Korea to be developed to the 11th economic power in the world. Burma is still politically under the military rule. Contrastingly enough, Korea is in the age of civilian rule after the democratic election in 1988. It is evident that different economic performances resulted from economic system and state character under the military regimes have been greatly effected until now.*